

2021

전주시의회 회보
제25호

시민과 함께하는

전주시의회

www.council.jeonju.go.kr



CONTENTS



- | | | |
|----|--------------|--|
| 04 | 발간사 | 전주시의회 의장 강동화 |
| 05 | 축사 | 전주시장 김승수 |
| 06 | History | 전주시의회 연혁 |
| 07 | 후반기구성 | 제11대 구성 |
| 08 | 전주시의회 의원 총람 | 제11대 후반기 |
| 10 | 의원 현황 | 행정구역으로 본 제11대 의원 현황 |
| 12 | 2020 의정활동 성과 | 전주시 의회
운영위원회/행정위원회/
복지환경위원회/문화경제위원회/
도시건설위원회/예산결산특별위원회/ |
| 26 | 성명서/건의안/호소문 | |



시민과 함께하는 전주시의회



사진 | 경기전

29 사진으로 보는 의정활동

38 의원 연구단체 활동

의정포럼연구회/생태교통연구회/
시정연구회/조례연구회/미래세대연구회

43 2020 의원의정활동

5분 자유발언/의정활동/시정질문

76 지방의회 체험교실

어린이의회

77 시의회NEWS

전주시의회. 청렴다짐교육 수료

78 전주풍경

기지제/팔복예술공장

82 회기운영계획

2021년도 회기운영계획

83 편집후기

편집을 마치며

2021 전주시의회 회보 제25호

발간등록번호 77-4640065-000001-10

발행인 전주시의회 의장

발행처 전주시의회

전주시 완산구 노송광장로 10

편집인 전주시의회 사무국

Tel. 063. 230. 3730

Fax. 063. 230. 3657

디자인/인쇄 휴먼스토리

표지 출처 전주다음

www.council.jeonju.go.kr



“시민과 함께 하는 의회를 만들겠습니다.”

불철주야 선진의회 구현을 위해 노력해온 지난 시간을 담아 <제25호 의회보>를 발간하게 되어 대단히 뜻깊게 생각합니다.

무엇보다 제11대 전주시의회가 임기반환점을 돌아 후반기를 맞이한 이때, 그간의 의정활동을 돌아보고 새로운 비전을 세운다는 점에서 그 의미가 더욱 깊다고 할 것입니다.

전주시의회는 그동안『시민과 함께하는 전주시의회』를 기치로 현장 중심 의정 활동으로 지역주민과 소통하며 시민 불편사항 해결에 각고의 노력을 기울였습니다.

또한, 전주시가 추구해야 할 가치와 비전을 제시하며 시민의 뜻에 부합하는 행정이 구현될 수 있도록 민의(民意)의 대변자로서 맡은 소임을 충실히 다해왔습니다.

특히, 지방자치법 전부 개정안 의결 촉구 결의안 등을 통해 시민의 목소리를 정부와 국회에 전달하였으며, 시민의 눈높이에 맞는 전문성 함양을 위해 5개의 연구회를 두고 부단히 노력했다고 자부합니다.

이제 신축년(辛丑年) 새해를 맞이한 만큼, 선진의회 구현을 위해 헌신했던 지난날의 땀을 토대로 다시금 힘차게 나아갈 것을 약속드리며,

나날이 진보한다는 일진월보(日進月步)의 마음가짐으로 전주시의회는 앞으로도 시민을 위한 올바른 시정이 운영될 수 있도록 전심을 다하겠습니다. 새해에도 시민 여러분의 변함없는 지지와 관심을 부탁드리며, 하시는 모든 일에 축복과 행복이 가득하시기를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2021. 1.

전주시의회 의장 **강동화**



“전주다움, 의회와 함께 하겠습니다.”

존경하는 강동화 의장님과 전주시의회 의원님들의 의정 활동을 담은 전주시의회보 제25호 발간을 진심으로 축하드립니다.

누구도 예측하지 못한 코로나19는 인류의 생명뿐만 아니라 우리의 평범한 일상을 빼앗고, 모든 국가를 사상 초유의 경제 위기로 몰아넣었습니다. 그러나 전주는 좌절하지 않았습니다.

위기 앞에서 선제적으로 대응하여 ‘코로나 19 위기 극복 모범도시’로 우뚝 섰습니다. 이는, 드높은 시민 의식과 시의회, 공직사회와 의료진이 헌신한 결과입니다. 또한, 민선 6기부터 일관되게 추진해온 사람 중심의 가치, 공동체 정신과 사회적 연대가 위기 앞에서 빛을 발한 것입니다. 민선 6기에 이어 민선 7기 지난 2년을 돌아보면 청와대와 국회, 기재부를 비롯한 중앙정부, 타 자치단체에서 보는 전주시의 위상은 몰라보게 달라졌습니다. 가장 전주다운 정체성으로 가장 세계적인 도시로 성장하고 있습니다. 대한민국 5대 관광거점도시로 선정되어, ‘문화기반 지속 가능 여행 도시’의 꿈을 키우고 있습니다.

이 모든 일은 행정의 노력만이 아닌, 존경하는 강동화 의장님과 전주시의회 모든 의원님들의 든든한 지원과 격려가 있었기에 가능했습니다. 민의를 대표하는 시민의 대표기관으로, 행정을 견제하는 감시기관으로 헌신적인 의정 활동을 펼쳐주신 의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오는 2021년에도 전주다움으로, 새로운 미래에 대한 상상력과 용기로, 시민의 삶을 바꿔나가겠습니다. 전주에 산다는 것이 자랑이 되는 도시, 전주사람이라는 것이 자부심이 되는 도시, 시민과 함께 만들어나가겠습니다.

2021년에도 의원님들의 적극적인 관심과 지원을 부탁드립니다. 다시 한번 전주시의회보 제25호 발간을 축하드리며, 전주시의회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2021. 1.

전주시장 김승수



1948년 7월 17일 공포된 제헌헌법 제97조에 의거 1949년 7월 4일 공포된 법률 제32호 지방자치법이 같은 해 12월 15일자로 개정되어 1950년 12월 지방자치를 위한 선거를 실시할 계획이었다. 그러나 1950년 6·25동란으로 인하여 지연되어 오다가 1952년 4월 25일 초대의원 선거가 실시되어 전주시의회가 구성되었다.

1949.07.04

지방자치법 제정 공포
(법률 제32호)

1952.04.25

초대 전주시의회 의원 선거
(21명)

1956.08.08

제2대 전주시의회 의원 선거
(16명)

1960.12.19

제3대 전주시의회 의원 선거
(18명)

1995.06.27

제5대 전주시의회 의원 선거
(45명)

1991.03.26

제4대 전주시의회 의원 선거
(45명)

1990.12.31

지방자치법 제8차 개정
(법률 제4301호)

1961.05.16

5·16 쿠데타로 지방의회
해산(군사혁명위 포고 제4호)

1998.06.04

제6대 전주시의회 의원 선거
(40명)

2002.06.13

제7대 전주시의회 의원 선거
(35명)

2006.05.31

제8대 전주시의회 의원 선거
(34명)

2010.06.02

제9대 전주시의회 의원 선거
(34명)

2018.06.13

제11대 전주시의회 의원 선거
(34명)

2014.06.04

제10대 전주시의회 의원 선거
(34명)





제11대 전주시의회 의원



의장 강동화

(인후1·2·금암1·2·진북)

부의장 이미숙

(효자4·5)



백영규

(중앙·완산·중화산1·2)



이기동

(중앙·완산·중화산1·2)



박병술

(동서학·서서학·평화1·2)



송승용

(동서학·서서학·평화1·2)



양영환

(동서학·서서학·평화1·2)



이남숙

(동서학·서서학·평화1·2)



김원주

(풍남·노송·인후3)



김윤철

(풍남·노송·인후3)



최용철

(풍남·노송·인후3)



정성길

(서신)



최명철

(서신)



박형배

(효자4·5)



채영병

(효자4·5)



김은영

(효자1·2·3)



이경신

(효자1·2·3)



김동현

(삼천1·2·3)



김승섭

(삼천1·2·3)



김현덕

(삼천1·2·3)



김남규

(송천1·2)



김윤권

(송천1·2)



김진옥

(송천1·2)



강승원

(덕진·팔복·조촌·여의동)



송상준

(덕진·팔복·조촌·여의동)



송영진

(덕진·팔복·조촌·여의동)



김호성

(진북·인후1·2·금암1·2)



박선전

(진북·인후1·2·금암1·2)



서난이

(우아1·2동·호성)



서윤근

(우아1·2동·호성)



박윤정

(비례대표)



이윤자

(비례대표)



한승진

(비례대표)



허옥희

(비례대표)

의원 현황 | 행정구역으로 본 제11대 의원 현황



행정구역으로 본 제11대 의원 현황



시민과 함께하는 전주시의회 기틀 다져

전주시의회가 '시민과 함께하는 전주시의회'를 기치를 내걸고 전주시민의 꿈과 희망을 실현하기 위해 2020년 한 해도 쉼 없이 달려왔다. 지난 1년간 전주시민의 행복과 지역발전을 위해 힘차게 달려온 전주시의회의 의정활동을 간추려 본다.



민생 조례 등 257건 처리

전주시의회는 올 한 해 동안 정례회(2회)와 임시회(8회) 등 10차례의 회의를 열어 조례안 113건, 동의안 101건, 결의안 3건 등 총 257건의 안건을 처리했다. 이 가운데 의원이 발의한 안건은 72건으로 범죄예방 활동 지원, 공정무역 육성 및 지원, 저출생 대책 및 출산장려 지원, 한국전쟁 민간인 희생자 위령사업 지원 등 다양한 조례를 직접 발의해 시민의 복리증진과 삶의 질 향상을 위해 힘써왔다. 시의회는 1월 정부의 「물가안정에 관한 법률」 제2조 및 동법 시행령 제4조에 따라 「무연탄 및 연탄의 최고판매가격 지정에 관한 고시」를 기습 변경 고시하여 서민 에너지빈곤층이 무연탄 및 연탄의 가격을 19.6%로 대폭 인상에 대하여 「연탄 가격인상 철회 촉구 건의안」을 채택하고 가뜩이나 어려운 에너지빈곤층의 현실을 감안하여 정부에 현 연탄가격 인상 정책을 철회하고, 저소득층의 맞춤형 에너지 복지정책 및 자활정책 마련 등을 요구하였다. 또 단순 인구수만으로 특례시를 지정하려는 지방자치법 전부개정안은 지방자치단체의 실질적인 행정수요와 재정규모, 유동인구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반드시 재검토 되어야함에 따라 낙후되고 광역시 없는 지역의 균형발전과 진정한 재정분권을 위해 전북의 중추도시인 「전주시를 특례시로 지정·육성할 것을 강력히 촉구」 건의하였다. 또 지난 6월에는 한국농수산대학 분교 법안 철회를 촉구하는 성명서를 통해 한농대 분교법안과 농림축산식품부의 한농대 분교 검토는 지역균형발전을 저해하고 지방분권을 정면으로 역행하고 있다는 점에서 66만 전주시민의 이름으로 한농대 개정법률안을 즉각 폐기할 것을 강력히 촉구하는 성명서 등을 발표하기도 했다.

시정 현안에 시민 목소리 대변

의원들은 불합리한 행정제도의 개선, 미세먼지와 대기오염에 대한 환경정책, 보편적 복지정책, 문화·예술정책, 출생정책, 공공임대주택사업, 도시정비사업 등 다양한 주제의 시정질문(12건)과 5분 자유발언(81건)을 통해 시정 현안에 대한 문제점을 지적하고 시정의 방향과 대안을 제시하여 집행부에 대한 견제·감시 역할은 물론 시민의 목소리를 대변하기 위해 노력해왔다.

집행부 견제·감시 역할 충실

시의회는 또 지난 11월 19일부터 27일까지 9일간 시정 전반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해 집행부에 대한 견제·감시 역할에도 충실했다.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는 지난 1년 동안 집행부가 추진해온 각종 사업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시민의 혈세가 효율적으로 사용되었는지 예산집행과정을 중점적으로 확인하고 주요 시책 및 사업에 대한 추진결과 등을 점검했다. 특히, 내실 있고 심도 있는 감사 실시를 위해 시정의 위법·부당 행위, 예산낭비 사례, 시민생활에 불편을 주는 불합리한 관행 등 시정 전반에 대한 시민 제보를 의회 홈페이지를 통해 받기도 했다.

의원 연구 역량 및 전문성 강화

시의회는 조례연구회, 의정포럼연구회, 생태교통연구회, 시정연구회, 미래세대연구회 등 5개의 의원연구단체를 중심으로 지역 현안과 다양한 사회 문제와 관련한 각종 토론회, 강연회, 간담회 등을 20여 차례 실시하여 의원들의 연구 역량과 전문성을 강화하는 데 힘써오고 있다. 특히, 올해에는 일회용품 없는 장례문화 확산, 독립적인 인권센터 체제정비, 경로당 운영 활성화 방안, 전주실내체육관 공간조성, 1인가구 안전강화 지원, 청년 커뮤니티 주거복합단지 조성, 청년 장애인·일반 쉐어하우스, 선진화된 조례 입안 프로세스 정립 등 입법 연구활동과 관련한 토론회와 강연회를 개최하여 시민, 사회단체, 전문가 등 각계각층의 의견을 수렴하고 시민 모두가 공감할 수 있는 정책 대안을 모색하고 있다.

시민 소통 강화

시의회는 또 시민과 소통하고 시민이 참여하는 열린 의회를 구현하기 위해 의정정책자문단, 산학협력 현장실습, 의원 홈페이지 동민과의 대화 등을 운영하여 역동적인 소통 의정을 펼쳐왔다. 이 외에도 어린이의회 체험교실 운영, 본회의 생중계 및 방청 등을 통해 의회 현장을 생생하게 체험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해 오고 있으며 다양한 매체를 통해 의정 소식을 시민들에게 전하고 있다.



운영 위원회



생산적인 의정활동 환경 조성 원활한 의회 운영 주력



위원장 이기동



부위원장 김호성



의회운영위원회(이기동, 김호성, 박형배, 송승용, 송영진, 이경신, 이남숙, 정섬길, 채영병 의원)는 의회의 전반적 업무를 관장하는 핵심적 역할을 수행하며 의회 운영에 관한 사항, 의회사무국 소관에 관한 사항, 회의규칙 및 의회운영과 관련된 각종 규칙에 관한 사항을 처리하고 있다. 특히, 행정사무감사 및 예산심의에 대한 전문성을 높이고 연구하는 의회를 만들기 위해 의원들의 역량강화 연찬회를 개최하는 등 생산적인 의정활동 환경을 조성하는데 주력해왔다. 아울러 내실 있고 효율적인 의회 운영 통해 시민이 감동하는 의정활동과 청렴하고 바른 의회상을 구현하고 있다. 또한 위원회는 올해 조례 제·개정안, 건의안 등 총 20건의 안건을 심도 있게 심의했다. 「전주시의회 연구단체 구성 및 운영 조례



1,2,3 의정활동 역량강화 전문교육



「일부개정조례안」 일부개정을 통해 연구단체 심의위원회인 운영위원회에서 연구단체의 정책연구용역 승인 및 정책개발비 책정 및 조정을 할 수 있도록 명시하고 연구단체 활동에 필요한 예산 지원의 범위를 정책연구용역 발주 시에는 정책개발비에서 지원도록 하여 용역비 추진의 근거를 마련했다. 또 「전주시의회 의원 윤리강령 및 행동강령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일부개정으로 최근 국민권익위원회에서 윤리강령과 관련된 표준안대로 개정하는 것으로 표준안을 반영했다.

행정위원회



시민의 편에서 불합리한 행정 개선
집행부 감시·견제 역할 충실



위원장 김은영



부위원장 강승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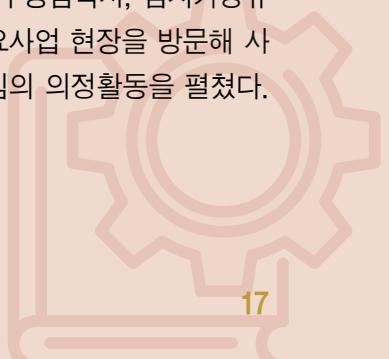


행정위원회(김은영, 강승원, 김현덕, 박병술, 박형배, 송상준, 정섬길, 최명철 의원)는 전주시정의 흥보와 예산, 인사, 감사, 조직관리 및 공유재산관리 등 시정의 중추적 역할을 담당하고 있는 공보담당관·감사담당관·시민소통담당관·인권담당관·기획조정국·전주시립도서관·덕진도서관·전주풍남학사사무소 소관에 속하는 사항을 관장하고 있다. 특히 시민을 위한 정책이 실현될 수 있도록 행정집행을 감시·견제하고, 건전 재정과 투명한 집행 절차를 위한 의정 활동에 주력하며 민의(民意)가 올바르게 반영될 수 있도록 혼신의 힘을 다하고 있다. 또한 위원회는 제366회 임시회부터 제376회 정례회까지 10차례 회의에서 조례안 22건, 동의안 9건 등 총 52건의 안건을 심사·처리했다.



- 1 전주승화원 현대화 사업 현장점검
- 2 전주시 드림스타트 덕진센터 건물·토지 매입지 현장활동
- 3 전주월드컵골프장 잔디관리 점검
- 4 김치가공유통시설 조성예정지 현장활동
- 5 아중호수 도서관 건립 예정지

주요 처리 안건에는 「전주시 시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 「전주시 행정지구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전주시 지방채 발행 동의안」, 「전주시 정책실명제 운영 조례안」 등이 있다. 위원회는 또 전주풍남학사, 김치가공유통종합센터 구축 부지, 전주월드컵골프장, 시설관리공단, 공유재산관리계획 지역 등 주요사업 현장을 방문해 사업 추진 상황 및 운영 실태를 점검하고 시민의 의견을 청취하는 등 발로 뛰는 현장 중심의 의정활동을 펼쳤다.



복지환경위원회



시민 복리 증진과 쾌적한 환경 조성
복지 취약계층 자립 촉진



위원장 서난이



부위원장 허옥희



복지환경위원회(서난이, 허옥희, 김진옥, 백영규, 송승용, 이미숙, 채영병, 최용철 의원)는 66만 시민에게 생산적인 복지서비스가 이뤄질 수 있도록 시민의 건강과 복리증진, 환경보전에 정점을 두고 운영되고 있으며, 복지환경국·보건소·맑은물사업본부·동물원 소관에 속하는 사항을 관장하고 있다. 위원회는 복잡다양해지고 있는 복지수요와 환경에 대한 관심을 반영하여 더 나은 전주시민의 삶을 위한 열정적인 의정활동에 매진하고 있다. 특히, 시책 추진과 관련한 간담회를 수시로 개최하여 집행부를 견제·감시하고 있으며, 시민들의 뜻을 수렴하기 위한 다각적인 소통의 채널을 통해 실질적인 정책을 발굴하고 있다. 위원회는 올 한 해 10차례 회의를 열어 조례안 30건,



1,2 전주시복지재단 전주사람 방문, 애로사항 청취
 3,4 자연생태관 운영상황 점검
 5 수소놀이체험관 조성 현장점검

동의안 23건 등 총 66건의 안건을 다뤘다. 그동안 처리한 주요 안건을 살펴보면, 「전주시 저출생 대책 및 출산장려 지원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전주시 새활용센터 민간위탁관리 동의안」 등의 제·개정을 통해 복지 취약계층을 지원하고 「전주시 미세먼지로 인한 피해 예방 및 저감 지원 조례」, 「전주시 폐기물 관리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의 제·개정으로 시민이 쾌적하고 안전한 환경조성을 위한 법적 기반을 마련했다. 위원회는 또 전주자연생태관, 전주시복지재단, 업사이클센터 선진지 방문, 새활용센터 '다시봄' 조성사업 현장 등을 방문하여 시민을 위한 실질적인 의정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주요 시책사업 추진 상황을 꼼꼼히 점검했다.

문화경제위원회



전통문화 및 탄소산업도시 육성
코로나 극복 위한 지역경제 활성화



위원장 김승섭



부위원장 송영진



문화경제위원회(김승섭, 송영진, 김남규, 김윤철, 이기동, 이남숙, 이윤자, 한승진 의원)는 시민들의 복리 증진 및 예술 창달, 지역경제 활성화, 지식 정보화사회 구현등에 중점을 두고 운영되고 있으며, 문화관광체육국·신성장경제국·농업 기술센터·예술단운영사업소 소관에 속하는 사항을 관장하고 있다. 위원회는 세계적인 전통문화도시로 떠오르고 있는 전주의 명성을 드높이고 전통과 미래가 조화되는 잘 사는 전주를 만들기 위해 진력하고 있으며 특히, 관광문화 콘텐츠 개발 및 산업화를 통한 고용 창출과 경제적 부가가치 창출에 중점을 두고 소상공인의 육성 및 지원 등으로 지역경제 활성화를 추진해왔다. 위원회는 올 한 해 10차례 회의를 개최해 조례안 24건, 동의안 29건 등 총 58건의 안건을 심사



1



2



3



4



5

1,2 전라북도 대표관광지로 선정된 덕진공원 연화교 재가설 공사 현장점검

3 완산벙커 1973 사업지 현장점검

4 전라감영 재창조 복원 사업현장 점검

5 전주첨단벤처단지 내 '전주혁신창업허브 사업지' 현장활동

·의결했다. 특히, 「전주시 문화예술교육 지원 조례」, 「전주음식 명인·명소 등 발굴 육성 조례」, 「전주시 문화의 집 설치 및 운영 조례」, 「전주시 고령자 경비원의 고용 안정에 관한 조례」 등을 제·개정해 문화유산 보존을 통한 국가관광 거점도시 육성 발전을 위한 토대를 마련했다. 또한 팔복예술공장, 전라감영 복원지, 덕진공원 전주시립예술단 운영계획을 청취했으며, 다양한 현장 활동을 통해 일자리확대 및 중소기업 육성 방안 등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노력했다.

도시건설위원회



친환경 녹색생태도시 조성
지속발전 가능한 사회 구현



위원장 김원주



부위원장 김윤권



도시건설위원회(김원주, 김윤권, 김동현, 김호성, 박선전, 박윤정, 서윤근, 양영환, 이경신 의원)는 시민안전담당관·생태도시국·사회연대지원단·시민교통본부 소관에 속하는 사항을 관掌하며 전주시를 쾌적하고 안정된 도시와 친환경적인 녹색생태도시로 만들기 위한 도시건설 행정분야를 책임지고 있다. 위원회는 도심공동화 현상이 심화되고 있는 원도심지역의 경제 활성화를 적극 추진하고 무분별한 개발을 억제하여 친환경녹색도시를 만들어 가는데 앞장서고 있다. 위원회는 제366회 임시회부터 제376회 정례회까지 10차례 회의에서 조례안 18건, 동의안 8건 등 총 43건의 안건을 심도 있게 심사했다. 주요 안건을 살펴보면, 「전주시 시민안전보험 운영 조례」,



1 금암교차로 사업현장 점검

2 이중천 생태천 보건사업 현장방문

3 마을버스 '바로온' 운행상황 점검

4 서곡광장에서 추천대교간 도로개설 공사현장 점검

5,6 국도대체 우회도로 4차로 개설 공사현장 점검

「전주시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조례」, 「전주시 주택조례 일부개정 조례」, 「전주시 고령운전자 교통사고 예방을 위한 지원 조례」, 「전주시 이륜자동차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 「전주시 지속가능 교통물류체계 기본 조례」, 「전주시 소하천 점용료 등 징수 조례」 등이 있다. 위원회는 아중천 생태하천 복원 및 매화지구 우수저류시설 설치 사업현장, 마을버스 바로온 진행상황 점검, 금암광장 등을 방문하여 시민의 생활과 직접 연관되는 사업현장을 찾아 시민이 안전하고 행복한 삶을 영위할 수 있도록 힘을 쏟았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투명하고 건전한 재정 운용
재정 효율성 극대화 주력



위원장 송승용



부위원장 한승진



예산결산특별위원회(송승용, 한승진, 김동현, 김윤권, 김윤철, 김현덕, 박병술, 박선전, 박윤정, 송상준, 송영진, 최용철, 허옥희 의원)는 한정된 재원이 효율적으로 배분되어 예산이 낭비 되지 않고 전주시민의 복리증진을 위해 사용될 수 있도록 심도 있고 투명하게 심사하는 데 중점을 두고 전주시 전반의 예산안과 결산의 종합적인 심사를 담당하고 있다. 위원회는 집행부의 경제활동에 있어 재정의 역할이 증대되고 이에 따라 예산안 및 결산에 대한 심사기능을 한층 더 전문화하고 효율화하기 위해 예산안과 결산승인안 심사를 앞두고 두 차례의 연찬회를 통해 이론과 실무를 겸비한 심사능력을 향상시켰다.



1



2



3

1 지방예산분석 실전 세미나

2,3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심의

위원회는 2020년도 본예산 편성 이후 변동된 국·도비 보조사업 조정 및 법적·의무적 미부담 경비 등으로 편성된 「제1회 추가경정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심사에서 단순 삭감에 그치는 것이 아닌 불요한 예산을 지역경제 활성화와 맞춤형 복지체계 확충을 위한 예산으로 편성될 수 있도록 심사를 했다. 또 「2019회계연도 결산 승인안」, 「2019회계연도 예비비 지출(사용) 승인안」 심사에서는 예산의 반복적인 이월과 과다한 불용 등 비효율적 예산집행 사례를 시정·개선하도록 집행부에 요구했다.



25



성명서

“착한 임대료’운동에 건물주들의 참여를 호소합니다”
“정부와 국회는 임대료 인하 지원법 개정을 서둘러주십시오”

코로나 19 감염병 확산으로 지역경제가 얼어붙고 있습니다.

한옥마을 관광객이 급감하고 상가마다 매출이 하락하면서 자영업자들이 생계 위협을 받을 지경에 이르렀습니다. 전주시는 지난 2월 코로나 19 여파로 큰 피해를 입고 있는 한옥마을 자영업자들을 돋기 위해 건물주들을 상대로 10%이상 임대료 인하 운동을 펼쳤습니다.



이 운동은 건물주와 임대자간의 고통을 분담하기 위한 ‘착한 임대료’운동으로 불리기 시작하면서 한옥마을을 넘어 전통시장 까지 확산되었고 급기야 문재인 대통령까지 나서서 칭찬할 만큼 전국적인 모범 사례로 평가받고 있습니다. 전주에서 시작된 착한 임대료 운동은 지금 서울과 경기, 부산, 대전, 광주 등 전국으로 번지고 있습니다. 그러나 아쉽게도 이 운동에 동참하는 건물주들의 참여는 아직까지 미흡하기만 합니다. 서로 북돋우며 다 같이 잘 살아가는 상생(相生)은 어느 한쪽의 일방적인 희생과 요구만으로는 이뤄질 수 없습니다.

전주시의회는 착한임대료 운동에 동참하는 건물주에 대해서는 세제혜택 등 정부의 인센티브 정책이 뒤따라야 한다는 판단입니다. 다행히 정부가 27일 건물주가 임대료를 인하 할 경우 일정금액을 정부가 지원하는 방안을 제시했습니다. 전주시의회는 정부의 이 정책 발표를 적극 지지하고 환영합니다.

아울러 전주시의회는 코로나 19 확산으로 생계 위협을 받고 있는 임대인들의 형편을 고려하여 국회와 함께 최대한 빠른 시일 내에 관련 법령을 개정, 착한 임대료 운동이 결실을 맺어 가기를 촉구하는 바입니다.

전주시의회는 또 건물주들의 적극적인 동참을 호소합니다. 임대인과 임차인이 서로를 헤아리는 마음으로 상생해나간다면 코로나 19가 아무리 큰 고통을 주어도 능히 감당하고 이겨 낼 것입니다.

전주시의회도 전주시와 함께 착한 임대료 운동에 동참하는 건물주들에 대해 정부와 별도로 전주시 차원의 지원 방안을 다각도로 모색하겠습니다. 코로나 19 고통을 서로 분담하고 지역 상생을 위해 착한 임대료 운동에 모두가 참여해주실 것을 거듭 당부드립니다.

2020. 2. 28



결의안

제21대 국회는 지방분권 강화를 위한 「지방자치법 전부개정안」을 반드시 의결하라

지방분권은 지방자치를 완성 시키기 위한 선결과제이며 더는 미룰 수 없는 시대적
사명이자 국민적 요구이다. 그러나 대한민국 제20대 국회는 지난해 3월 지방분권과
풀뿌리 지방자치의 활성화를 위해 지방자치법 전부 개정안 처리를 끝내 외면하고 말았다.



전주시의회는 제20대 국회의 무책임한 태도에 강한 유감과 함께 이를 규탄하지 않을 수 없다.
전주시의회는 오는 5월30일부터 임기를 시작하는 제21대 국회에 주민자치와 주민선택권 등을 폭넓게
보장한 지방자치법 전부개정법률안을 반드시 의결해 줄 것을 66만 전주시민과 함께 엄중히 요구한다.
또한 전주시의회는 전부개정법률안에 포함된 인구 100만 이상 대도시 특례시 지정기준에서 인구 50만 이상
도청소재지도 포함시킬 것을 요구한다.

당초 발의한 지방자치법 전부개정법률안은 지방자치 강화를 위해 32년 만에 개정 추진된 법률안으로 주민이
조례를 발의할 수 있는 주민 조례 발안제를 비롯해 자치단체의 기관구성을 주민에게 위임한 주민 선택권
보장 및 지방분권 강화를 위한 특례시 지정 등을 담고 있다.

이에 전주시의회는 대한민국 제21대 국회에 지방정부와 지방의회의 권한 확대 및 주민자치권을 폭넓게
보장하고 있는 지방자치법 전부개정법률안에 인구 50만 이상 도청소재지의 특례시 지정은 물론, 우리나라에
완전한 지방자치가 확립될 수 있도록 그 역할과 책임을 다해줄 것을 강력히 요구하며 다음과 같이 결의한다.

다 음

하나, 정부는 우리나라의 완전한 지방자치 정착을 위해 지방자치법 전부 개정안 재상정에 즉각 나서라
하나, 국회와 정부는 특례시 지정시 지역균형차원에서 인구 50만 이상 광역시 없는 도청 소재지를 포함시켜라
하나, 대한민국 제21대 국회는 지방자치법 전부 개정안을 조속히 의결할 것을 촉구한다.

2020. 5. 26



호소문

코로나를 멈추기 위해서는 사회적 거리두기를 실천해야 합니다.

존경하는 66만 전주시민 여러분!

유난히도 길었던 장마와 태풍을 뒤로하고 민족 최대의 명절 추석이 다가오고 있습니다. 우리는 그동안 한가위 보름달 같은 넉넉한 마음으로 고향 부모님과 가족들을 만나 행복한 시간을 보내왔습니다. 그러나 안타깝게도 올해 추석은 코로나 19 감염병 확산을 막기 위한 사회적 거리두기를 먼저 생각해야 하는 절박한 명절을 맞게 되었습니다. 광복절 이후 우리 전주와 전북에서도 이미 70여 명의 확진자가 나와 지역사회에 우려와 경각심을 불러일으키고 있습니다. 특히 코로나 19 위중·중증 환자 중 상당수가 노인층이어서 코로나 감염 예방에 어르신들의 각별한 주의가 요구됩니다.



사랑하는 전주시민 여러분!

감염병 전문가들은 이번 추석 연휴 기간을 코로나 19 확산을 막는 중대 기로로 보고 있으며, 정부에서도 고향 방문 자체를 적극 권고하고 있습니다. 내일을 위해 오늘을 멈춘다면, 우리는 보다 더 안전한 내일을 맞이할 수 있습니다. 만일, 사회적 거리두기를 외면하고 민족대이동이 벌어진다면, 코로나 19 극복의 길은 영영 묘연해질지도 모릅니다. 가족과 함께 하지 못하는 아쉬움이 앞서지만, 이번 추석만큼은 우리 모두의 안전한 내일을 위해 고향 방문을 자제하여 주실 것을 간곡히 호소드립니다.

존경하는 전주시민 여러분!

코로나 사태 장기화로 지역경제 역시 매우 심각한 상황을 맞고 있습니다.

우리의 이웃인 소상공인들의 매출 감소가 생계를 위협하는 지경에 이르렀습니다. 썰렁한 전통시장을 여러분의 온기로 채워주십시오. 극심한 경기 불황을 겪고 있는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전통시장을 이용하고 어려운 이웃을 생각하는 따뜻한 추석 명절을 함께 만들어 가기를 당부드립니다. 전주시의회는 전주시와 함께 코로나 19 방역에 혼신의 힘을 다하겠습니다. 추석 명절, 고향에서의 만남을 잠시 미뤄두고 사회적 거리두기를 먼저 실천해주실 것을 거듭 당부드립니다.

감사합니다.

2020. 9. 22



사진으로 보는 의정활동



전주시의회는 지난 3월 운영위원회를 열고 코로나19 발생에 따른 시민피해를 줄이고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3월 10일부터 4일간 임시회를 열고 전주시가 긴급편성한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심의 했다.



전주시의회가 지난 3월 코로나19 피해를 입고 있는 딸기 농가들을 돕기 위한 소비촉진 행사에 나섰다.



사진으로 보는 의정활동



전주시의회 의장단은 지난 4월 코로나19 긴급지원대응팀을 운영하고 있는 전주형 재난기본소득 시청 상황실과 현대해상에 설치된 소상공인 지원 상황실을 방문해 운영상황을 점검하고 근무자들을 위문 격려했다.



전주시의회 여성의원들이 지난 5월 한국전통문화전당에서 여성정책전문가들과 함께 여성폭력방지를 위한 분야별 여성정책 및 피해자 보호방안 실현을 위해 여성폭력방지 정책 제안과 관련 입법지원 방향을 모색하였다.



사진으로 보는 의정활동



국민권익위원회 소속 청렴연수원과 전북시군의회의장협의회는 6월 15일 전북 순창군 건강장수연구소에서 전국 최초로 권역단위 지방의회 청렴교육을 실시했다.



전주시의회가 지난 7월 제11대 전주시의회 개원 2주년 기념식을 갖고 본격적인 후반기 의정활동에 돌입했다.



사진으로 보는 의정활동



전주시의회는 지난 9월 임시회 4차 본회의에서 추석명절 기간 코로나 19 감염병 확산을 막기 위해 사회적 거리두기가 반드시 필요하다며 실천을 당부하는 「사회적 거리두기 참여 호소문」을 발표했다.



전주시의회 의장단 및 사무국 직원들은 지난 9월 추석을 앞두고 전주 모래내시장을 찾아 전통시장 추석 장보기를 했다.



사진으로 보는 의정활동



전주시의회는 지난 9월 전주시의회 소회의실에서 전 의원들을 대상으로 성희롱·성매매·성폭력·가정폭력 등 4대 폭력 예방을 위한 통합교육을 실시했다.



전주시의회가 추석을 맞아 따뜻한 명절 분위기 조성과 이웃사랑 실천을 위해 사회복지시설 위문에 나섰다.



사진으로 보는 의정활동



전주시의회가 지난 10월 자전거도로 현황 및 불편·개선사항 파악을 위해 자전거를 타고 주요 간선도로인 기린대로에서 현장라이딩을 추진했다.



전주시의회가 지난 11월 완주군 상관리조트에서 연말 정례회를 앞두고 전문강사를 초빙, 예산 심사 및 행정사무감사 기법과 폭력예방교육 등 의원들의 전문성 향상을 위한 '의정활동 역량강화 전문교육'을 실시했다.



사진으로 보는 의정활동



전주시의회는 코로나19 재확산등으로 사회적거리두기 강화에 따라 어려움에 처한 지역상권 및 지역배달업체를 살리기 위해 도시락 데이(DAY)를 진행했다.



김부겸 전 의원이 전주시의회를 방문, 간담회를 갖고 코로나 19장기화에 따른 지역경제 활성화 등 지역현안에 대한 간담회를 가졌다



사진으로 보는 의정활동



전주시의회는 지난 10월 제8회 지방자치의 날을 맞아 ‘전북 지방자치발전 유공자 표창 수여식’을 갖고 전북 지방자치발전에 기여한 유공자로 김종상씨(전주동양비니루 대표)와 전주시 의회사무국 안성효 주무관을 선정했다.



지난 11월 전주시의회의장 및 도시건설위원회 의원들이 참석한 가운데 지역 청년 이탈 등 다양한 지역 내 문제에 대해 주민들과 함께 해법을 찾아나가는 거점 소통협력공간인 ‘사회혁신전주’ 개소식을 가졌다.



사진으로 보는 의정활동



전주시의회는 지난 11월 시의회 의장실에서 한국노총 전북본부 임원진과 노동존중 정책 방안 및 제도 개선과제에 대해 간담회를 가졌다



전주시와 전주시의회는 공익성과 경제성을 두루 갖춘 전주형 화폐 '전주사랑상품권' 출시 기념행사에서 지역경제 활력을 위해 시민들의 상품권 이용을 당부했다



소통을 통한 연구의 장 마련

전주시의회 의원연구단체인 의정포럼 연구회(회장 이경신)는 전주시 현안 문제에 대해 의원들간의 자유로운 소통을 통해서 연구의장을 마련하고 이를 전주시 정책에 반영할 수 있기를 하는 등 적극적인 활동을 시작했다.

금년에는 최근 우리나라의 출산율이 세계 최저수준으로 급감하고, 전주시 같은 흐름을 보이고 있다는 점에 주목하여 전주시의 저출산 대응 방안을 연구회의 주요 연구 주제로 삼아 활발한 토론을 벌였다.

특히 전주의 합계출산율이 전국 평균

에도 미치지 못하고, 전국 260개 기초 단체 중 175위로 하위 40%에 속해 있는 반면, 소요된 예산에 비해 정책 체

감도가 낮고, 저출산 현상이 더욱 심화되고 있으며, 저출산 시책의 경우 임신, 출산 정책에 편중되어 있다는 점이 가장 큰 문제로 인식되었다.

또한 전주시 저출산 대응 정책은 타 광역시도의 정책을 답습하기 보다는 전주시의 환경과 인구 구성의 특성을 감안하여 보다 독자적이고 적극적인 전략을 취해나가야 할 필요가 있음에 공감하였다.

이러한 문제인식을 따라 의정포럼 연구회에서는 지난 9월 22일 '전주시 저출산 대응을 위한 정책방안 연구' 착수 보고회를 개최하고, 전주시민의 저출

산 대응을 위한 방안을 고민하는 연구 용역을 시작하였다.

연구회 회장인 이경신 의원은 "전주시의 저출산 문제는 우리 전주의 지속과 미래를 결정짓는 가장 중요한 요소"라고 말하며 "연구용역을 통해 종합적인 진단과 정책방안들을 도출하고, 결과를 참고하여 다양한 저출산 정책 제안 및 조례 제정을 이어가겠다"라고 말했다.



생태교통
연구회

지속 가능한 교통물류를 위한 대중교통활성화에 관한 연구 착수보고회

| 용역수행 | 전북대학교 산학협력단 | 일시 | 2020.9.16 수요일 | 장소 | 전주시의회 5층 소회의실 | 주최 | 전주시의회 생태교통연구회



생태교통 활성화 내실있는 대안제시

전주시의회 의원연구단체인 생태교통 연구회(회장 김진옥 의원)는 제11대 전주시의회 의원들이 환경보전과 시민복리를 위한 생태교통활성화 방안을 연구하고 공유하기로 했다. 연구회는 의회 차원의 유기적인 협력방안 및 정책 제안 마련 등의 생산적이고 능동적인 연구 성과를 도출하기로 의견을 모았다.

연구회는 또 생태교통과 관련한 지역 현안에 대한 올바른 대안제시를 가장 중요한 목표로 설정하고 시급한 생태

교통분야의 지역 현안 해결을 위해 의회 스스로의 내부적 역량을 한 곳에 모아 추진해 나가기로 했다.

2020년 생태교통연구회는 전주시 대중교통활성화를 위해 많은 노력을 한 해였다. 연구회 주관 '전주시 지속 가능한 교통물류체계로서 대중교통활성화를 위한 연구용역'을 추진하고 있다. 또 대중교통활성화를 위해 한국 교통연구원, 교통안전공단의 연구위원, 선임연구원 등을 초청하여 토론회를 개최하는 등 지속적인 노력을 하고 있다. 이를 통해 전주시 대중교통이 제 기능을 하기 위해 구체적인 정책 제안을 통한 대응방안을 함께 논의하는 등 내실 있는 연구단체 활동을 이어가고 있다. 연구회 회장 김진옥 의원은 세계는 지

금 지원의 고갈, 기후환경의 위기등 어두운 미래에 대해 초월적 대응이 요구되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지속 가능한 우리사회, 우리나라를 위해 머리를 맞대고 논의해야 한다면서, 전주시 지속 가능한 교통물류체계 기본조례에 명시되었듯이 대중교통 활성화, 자전거 이용 활성화 등 생태교통을 위한 노력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시정 연구회



지방재정진단 및 재정운용 개선안 제시

시정연구회(회장 박선전의원)는 제11대 후반기 원구성에 맞춰 연구회 회칙에 따라 새롭게 임원진을 구성하였다. 부회장엔 최용철, 이윤자의원을 비롯 감사에는 채영병의원, 사무국장에는 한승진의원이 새로운 임원진으로 각각 선출되었다.

연구회는 전주시민의 실생활과 밀접한 정책을 발굴하고 제시하고자 다양한 방식의 연구 활동들을 추진해 나가고 있다. 연구회는 의회차원의 정책역량강화를 위해 “전주시 지방재정진단

및 재정운용개선방안”에 대한 학술연구용역을 실시하였다.

결산에 대한 효율성 및 책임성을 점검하고 전주시 지방재정운영의 건정성을 확보하기 위한 세입확충방안, 세출효율화 방안, 재정운용방안 등을 제시하는 것을 목적으로 최종 보고를 마칠 계획이다.

또한, 연구회는 지난 2020년 11월 25일에 포스트코로나 시대의 침체된 지역경제를 살리기 위한 전주시 예산이 효율적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전문가를 초청하여 지방재정이해 및 예산분석기법 등 지방예산에 대한 올바른 이해 습득을 위한 재정세미나를 개최하였다.

전주시의 지속가능한 발전과 새로운 환경변화에 전주시민이 실질적으로 도움이 될 수 있는 방안을 제시하기 위해 연구회 회원들은 뜰뜰 뭉쳐 연구 활동들을 지속해 나가기로 했다.



조례 연구회



「전주시 자치법규 일괄 정비」완료

전주시의회 조례연구회(회장 이남숙 의원)는 2020년도 전반기 중 「전주시 자치법규 일괄 정비」를 완료하였다.

작년 정책연구용역을 발주하여 총 144 건의 정비대상 조례를 최종 검토·선정하고 분야별 분과위원회를 구성 총 35 건의 일괄정비 조례안을 준비하여, 제370회 임시회(복지환경 분야), 제371회 임시회(행정, 문화경제, 도시건설 분야)에서 연구회 차원으로 공동발의하였다.

자치법규 일괄정비 사안은 조례연구회

가 핵심 연구주제로 선정하여 정비활동을 진행, 부서별 협의 및 법무팀 검토를 통한 내실 있는 일괄정비 연구활동 과정을 진행한 성과로 향후 지속적인 자치법규 정비 시스템을 지속 유지할 계획이다.

또한, 지난 8월 18일 타 지방의회 자치입법(조례) 관련 연구단체와 '의회 자치입법 전문성 강화 및 시스템 개선을 위한 토론회'를 개최하였다. 원주시의회 자치법규연구회와 공동 토론회를 추진, 조례입법 관련 연구단체와의 상호 연구 교류를 논의하고 향후 기초의회의 의원 발의의 내실을 다질 수 있는 다양한 의견 제안 및 공동연구 활동을 이어가기 위한 교두보를 마련하였다.

조례연구회 이남숙 회장은 "지방의원의 전문성 함양의 중요한 영역이 의원 입법 발의이며, 다양한 영역에서 함께 모여 논의하고 토론하며 민생조례를 숙성하는 과정이 매우 중요하다."고 말했다. 이어 이 회장은 "향후 조례연구회가 다양한 전문가들과 소통하고 협의하는 과정을 정착시켜, 내실 있는 조례개발과 연구 활동에 최선을 다할 것이다"고 덧붙였다. 또 특히 조례 입안 관련 시스템을 개발하고 장착시키는데 앞장서겠다."라는 포부를 밝히며 남은 제11대 후반기에도 전주시의회 의원연구단체의 활동 성과의 중추적인 역할을 이어갈 것을 다짐하였다.



전주시 미래 맞춤형 정책 방안 제시

전주시의회 미래세대연구회(회장 백영규의원)는 지속적인 인구유출 문제에 기인한 전주시 저출생·고령화 대응을 위한 세대별 일자리, 복지, 주거, 돌봄, 노동 등 모든 세대가 공감할 수 있는 맞춤형 정책 방안을 제시하고자 노력하였다.

특히 전주시 도시재생 청년 공간 중복 사업 검토를 위한 연구용역에서 제시된 대안을 통하여 청년공간 정책을 함께 논의하고 청년 거점 공간 효율화에 관한 아젠다를 모색하는 연구 활동을

상반기에 진행하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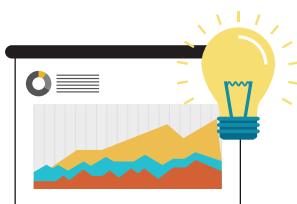
또한, 지난 6월 12일 장기간 코로나 19로 지친 시민들의 마음을 치유하고 함께 공감할 수 있는 의회 차원의 첫 시민 특강을 개최하였다.

「포스트 코로나 시대, 한국 사회와 민주주의」라는 주제로 관련 전문기를 초청하여 시민 공감특강을 기획, 코로나 시대 극복 및 포스트 코로나의 사회적 가치와 의미를 모든 세대가 함께 공유 할 수 있는 의미 있는 열린 토크콘서트를 진행하여, 많은 시민들과 함께 소통과 공감의 시대적 정신의 청사진을 제시하였다.

미래세대연구회 백영규 회장은 “미래

세대연구회의 연구 활동의 최종 목표는 모든 세대가 공감하는 정책연구라고 말했다. 백회장은 이어 전반기까지는 청년을 포함한 시대적 패러다임의 세대를 대상으로 진행된 연구 활동에 주력했다면, 향후 기후변화 대응을 위한 그린뉴딜 정책에 관심을 갖자고 말했다.

앞으로 계획에 대해서는 연구 활동을 준비해 다양한 계층 중심의 세대를 아우르는 정책 초점을 맞춰 나가겠다.”라는 포부를 밝혔다.





상임위 발언

쓰레기 불법투기 카메라 단속 효율 높이자

쓰레기 불법투기 단속 및 관리를 위해 매년 감시카메라 설치를 하고 있다. 그런데 실질적으로 보면 불법 감시카메라가 있어도 쓰레기 상습 투기지역이 있다. 차량에서 버리지만 않으면 감시카메라가 있어도 단속이 어렵다는 것을 이제 시민들도 알고 있다. 카메라만 사놓고 불법 쓰레기 투기자에게 과태료 부과는 안되는 그냥 보여주기식인 것이다. 실제로 쓰레기 불법 투기가 많이 이루어지는 곳은 상가와 공동주택의 경계 부근이다. 상습 불법 투기지역에 민원이 많이 발생하고 있고 매번 긴급대책반이 와서 치우는 일이 반복되고 있다. 상인들을 대상으로 교육을 시키든 아니면 보다 강력한 처벌대책이 있어야 근절 될 것이다.



의정활동

전주시 시민영양 기본 조례안 대표발의 시민건강증진과 삶의 질 향상 기여

백영규 의원이 제375회 전주시의회 임시회에서 전주시 시민영양 기본 조례안을 대표 발의 하였다. 최근 코로나19 및 독감백신 접종 등의 이슈들로 인하여 국민건강 및 영양에 대한 관심이 매우 높아지고 있다. 이에 체계적인 국가 영양정책 수립 및 시행을 통해 국민의 영양 및 건강증진을 도모하고 삶의 질 향상에 이바지하기 위한 목적으로 국민영양관리법이 제정되어 금년 9월부터 시행되었다. 법 제3조에 따르면 지방자치단체로 하여금 올바른 식생활 및 영양관리에 관한 정보를 국민에게 제공하고 필요한 대책을 수립·시행하도록 명시하고 있습니다. 더불어 법 제8조에서는 지방자치단체로 하여금 국민영양관리시행계획을 수립·시행하고 계획의 수립 및 추진 등에 필요한 사항은 조례로 정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이에 전주시 영양관리시행계획의 수립 및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과 동시에 전주시민의 영양관리 추진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본 조례안을 제안하였다.

중앙,완산,중화산1·2동
이기동 의원



5분 자유발언

**전주 제1산업단지 업종 규제 완화 시급
전주시 행정인식 변화해야**

코로나19 사태로 마스크, 방진복, 방호복 등 방역용품 제조업이 주목받고 있으나, 전주 제1산업단지에는 섬유, 의복, 펄프, 종이, 화학제품 제조업은 입주가 제한되고 있어 이 규정을 완화해야 한다. 이미 국가 정책으로 산단에 업종규제를 대폭 완화하는 추세지만 전주시는 어떤 대책도 강구하고 있지 않다. 다른 지자체가 지속 성장 가능성이 큰 마스크 생산공장을 유치하려 혈안이 되어있는 것에 비추어 전주시는 업종 제한 규정으로 불가하다는 태도만 고수하고 있다. 과연 전주시가 산업 동향 변화에 대응하고 있는지 의심스럽다. 전주 제1산업단지 관리 기본 계획에 섬유, 의복, 펄프, 종이, 화학물질 등 제조업에 대한 입주 허용 가능 규정을 마련하여, 당장 입주 및 공장허가 등이 가능토록 하는 절차 이행에 앞장서 줄 것을 강력히 촉구한다.



의정활동

**중화산2동 ‘꽃두렁마을’ 공동체 조성
주민간 생산 소통 나눔 공감 인기**

중화산2동 마을공동체 ‘꽃두렁마을’은 정성들여 수확한 텃밭 채소를 지역내 어르신들에게 전달했다. 지난 6월 첫 수확을 시작으로 이번이 네 번째 텃밭 채소 나눔이다. ‘꽃두렁마을’ 마을공동체는 지난 4월 중화산2동 주민센터 옥상에 약 100평 정도의 텃밭을 조성했다. 공동체 회원들은 각자 맡은 고랑을 잡초 없이 깨끗하게 관리하면서 수확한 채소를 지속적으로 관내 어르신들과 함께 나누는 것이다. 아울러, 가을에는 옥상 텃밭에 배추를 재배하여 그 수확한 배추로 김장을 담아 관내 독거노인 등 어려운 이웃들에게 나눠줄 예정이다. 각종 지역문제로 공동체의 중요성이 커지고 있는 요즘, 마을공동체에서 텃밭을 조성해 주민들간의 생산소통나눔의 공간으로 활용할 수 있기에 그 의미가 크다.



동서학, 서서학, 평화1·2동
박병술 의원

의정활동

‘착한임대료 운동’ 동참 촉구 상생하는 마음으로 건물주들 동참 호소

전주시의회 전반기 의장으로 활동했던 박병술 의원은 전주시 건물주들의 착한 임대료 운동에 동참을 당부했다. 박 의원은 지난 2월 28일 열린 임시회에서 최근 한옥마을에서 시작된 착한 임대료 운동이 전국으로 확대되어 모범사례로 평가받고 있으나 이 운동에 동참하는 건물주들의 참여는 아직 미흡한 상황이라며, 착한임대료 운동에 건물주들의 참여를 호소하는 「코로나19 지역경제 위기극복을 위한 상가임대료 인하 동참촉구」 성명을 채택했다. 시의회는 성명서에서 “서로가 상생하는 마음으로 건물주들이 이 운동에 적극 참여해달라”고 호소했다. 박 의원은 “착한임대인운동이 전국으로 확산되고 있지만 실제로 지역 내에서 도움을 받는 상인은 소수에 불과하다”며 “우리 지역에서도 임대료 인하에 동참하는 건물주들이 많아져 세입자들에게 힘이 돼 주셨으면 좋겠다”고 말했다.



의정활동

지방의정봉사대상 수상, 지역발전과 주민복리증진 및 지방의회 발전에 기여

전주시의회 박병술 의장이 2월 12일 전국의장단협의회 2차 임시회에서 전국시군자치구의회의장협의회(회장 강필구)로부터 ‘지방의정봉사대상’을 수상했다. 박 의장은 평소 지역발전과 주민복리증진에 힘써 왔으며 풀뿌리 지방자치의 전문성 강화와 생산적인 의정활동으로 지방의회 발전을 위해 기여한 공로로 이 상을 받았다. 박 의장은 2002년 6월 전주시의원으로 의정활동을 시작한 이래 풀뿌리 민주주의의 근간이 되는 지방의회 발전과 주민권익 신장에 헌신해왔고, 전주시의회가 시민과 소통하는 민주적인 열린 공간으로 자리매김하는 데 기여했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특히, 제11대 전반기 전주시의회 의장을 맡아, ‘시민을 행복하게 하는 의회’를 표방하고, 시민의 뜻과 이익을 대변하는 의회 본연의 역할을 재확인하는 등 권위를 탈피해 시민과 소통하는 의회 혁신에 앞장섰다.

동서학, 서서학, 평화1·2동
송승용 의원



의정활동

**장애인 복지증진 조례발의
장애인 행복한 삶 추구에 기여**

송승용 의원이 제375회 전주시의회 임시회에서 전주시 장애인 복지 증진 조례안을 대표 발의 하였다. 우리에게는 장애의 유무와 상관없이 인간으로서의 존엄성을 존중받고 누려야 할 권리를 보장받아야 할 권리가 존재한다. 장애인복지법 제9조에서는 지방자치단체로 하여금 장애인의 자립을 지원하고 보호가 필요한 장애인을 보호하여 장애인의 복지를 향상시킬 책임을 명시하고 있다. 또한 법 제13조에서는 조례를 통해 지방장애인복지위원회를 구성하도록 규정하고 있고 제63조를 통해 지방자치단체로 하여금 장애인복지단체 보호·육성을 위해 노력하도록 명시하고 있다. 이에 전주시의 장애인이 행복한 삶을 추구할 수 있도록 복지대책 추진 및 자립·편의제공 등의 지원에 대한 사항을 규정하고 관련 사항을 심의하기 위한 전주시 장애인복지위원회 운영에 관한 사항을 효율적으로 관리하기 위하여 본 조례를 제정하게 되었다.



의정활동

**장애인과 소외계층 인권향상 감사장
전북시각장애인연합회 전주지회**

전주시의회 송승용 의원(동서학, 서서학, 평화1·2동)이 11월 13일 (사)전북시각장애인연합회 전주지회(지회장 노창옥)로부터 장애인과 소외계층 권리보호 및 인권향상에 기여한 공로로 감사장을 받았다. 전북시각장애인연합회 전주지회에서는 송 의원이 복지환경위원회 위원으로 활동하면서 투철한 봉사정신과 사명감으로 장애인과 소외계층 권리보호와 인권향상에 기여한 공로를 높이 평가해 회원들의 뜻을 모아 감사장을 수여한다고 밝혔다. 송 의원은 “의원의 소임을 위해 노력했을 뿐인데 큰상을 받아 더욱 큰 책임을 느낀다”며 “앞으로도 사회적 약자 권리향상과 복지증진을 위해 더 열심히 의정활동을 하겠다”고 말했다.



동서학, 서서학, 평화1·2동
양영환 의원



5분 자유발언

장애인 전동스쿠터, 보험가입 지원하라! 보급실태 파악과 대책시급

전동스쿠터는 「보행안전 및 편의증진에 관한 법률 제2조」 및 식품안전처가 정하는 「의료기기의 규격」에서 자동차가 아닌 보행자로 분류하고 있다.

보통 자동차 사고의 경우 보험회사에서 사고 처리를 하게 되는 반면, 전동스쿠터와 같은 장애인보장구는 대차, 대인 사고가 발생하면 장애인 이용자가 개별 보상 청구해야 한다. 지난 2018년 금융위원회는 보험사각지대에 놓인 장애인을 위한 보험상품 개선을 추진하면서 생명보험협회가 전동스쿠터를 포함한 전동휠체어에 대한 보험을 출시하도록 한 바 있다. 전동보장구를 이용하는 장애인들은 보험의 필요성에 대해 절감하지만 보험이 처음 만들어져 시범운영 되는 성격이어서 개별 가입이 되지 않는 단체보험 형식으로 운영되고 있다. 강한 행정력을 가진 지자체가 적극 나서야 한다. 또한, 장애인 전동보장구가 해마다 빠르게 늘고 있지만 전주시는 보급실태에 대한 정확한 자료가 없어 몇 대가 운영되는지 조차 모르고 있다. 이에 대한 대책도 강구해주길 바란다. 장애물 가득한 전주시 도로에서 마치 생존게임을 하듯 살아가는 장애인들의 안전과 사고에 대한 보장을 조속한 시일내에 마련하여 주기 바란다.



5분 자유발언

몰락하는 전주! 전주·김제·완주 통합만이 대안이다

전주시는 노년층 인구는 증가하고 있지만, 청년들은 일자리를 찾아 다른 지역으로 떠나고 있다. 하지만, 전주시는 청년 인구 감소 문제 해결 의지를 보이지 않고 있다. 최근 5년간 전주시 기업 유치 실적은 20개사로 전라북도 14개 시군이 5년간 유치한 737개사 중 겨우 2.7%를 차지하는 실정이다. 이러한 상황을 타개하기 위해서는 기업 유치와 더불어 2013년 무산되었던 전주·완주 통합에서 더 나아가 김제까지 아우르는 대통합을 다시 한번 공론화할 시점이다. 전주시가 추진하고 있는 전통문화 특별시, 국가관광거점도시와 더불어 전주·완주·김제를 아우르는 통합만이 지역소멸의 암울한 미래를 해결할 수 있다. 완주의 산업자원, 군산·새만금과 연계한 대중국 교역로의 김제, 전주의 문화·교육·관광자원이 결부된 시너지 효과는 결국 이들 지역에 이익을 골고루 나눠줄 수 있다.



시정질문

전주교도소 이전, 활용방안 세워라 대형사고 우려되는 싱크홀 대책 필요

지지부진한 지역 현안을 함께 살펴보고 전주시의 적극적인 추진 방향을 묻고자 한다. 첫째, 전주교도소 이전·신축 사업 관련, 도시관리계획 결정 및 지형도면 고시 등의 행정 절차 이행 시 기존 12가구에서 20가구로 늘어난 상황에 대한 대책은 무엇인지, 이주민에 대한 토지 보상 절차에 따른 상황, 이주 대책 재정분담 상황 및 예산확보 방안, 이전 부지 활용방안에 대한 답변을 바란다. 둘째, 아동·청소년 폭력과 일탈의 예방과 보호권에 관하여 전주시 자유센터가 폐쇄된 경위와 향후 대안 및 자유센터 공간 활용방안, 주거빈곤 해소방안, 아동·청소년 일탈과 폭력 등으로 인한 치료 및 향후 예방 계획 등에 대해 답변 바란다. 셋째, 대형 재난 사고로 이어질 수 있는 싱크홀 관련, 빌生 원인에 대한 진상조사 및 종합적인 안전대책 수립 마련이 필요하다. 해묵은 지역 현안일 수도 있고, 여러 요인에 의한 사업이 더디게 진행될 수도 있다. 하지만, 주민들의 숙원 사업에 대한 전주시의 세심한 노력이 필요하다.



5분 자유발언

스마트 돌봄 플랫폼 사업 확대 비대면 맞춤형 돌봄체계 도입 필요

전주시는 얼마 전 '지역사회 통합돌봄 선도사업'의 하나로 어르신을 대상으로 하는 스마트 돌봄 플랫폼 서비스를 도입했다. 이 사업은 돌봄 공백이 우려되는 고위험군 87세대를 대상으로 24시간 누적된 개개인의 일상에 대한 정보를 통한 어르신별 활동 예측 및 상황 발생 시 선제 대응이 가능토록 관제 시스템을 운영하는 것이다. 본 의원은 이 사업이 스마트 시티를 구축하는 주요한 사례가 될 것으로 생각한다. 아직은 시범 선도사업이지만 4차 산업 기술을 이용한 다양한 분야에 걸친 응용기술 개발이 이뤄진다면, 스마트 시티 전주의 위상을 높일 충분한 가치와 가능성 있다. 스마트 돌봄 플랫폼 사업은 그래서 중요하다. 앞으로 노인 분야뿐만 아니라 장애인, 아동, 청소년 등을 위한 사회보장과 사회복지의 선도형 중장기 정책으로 자리를 잡길 바란다.

풍남,노송,인후3동
김원주 의원



의정활동

**자전거 타고 주민 불편 체험
시민과 함께 자전거 도로 개선 등 나서기로**

전주시의회가 10월 22일 자전거도로 현황 및 불편·개선사항 파악을 위해 자전거를 타고 주요 간선도로인 기린대로에서 현장라이딩을 추진했다. 이날 행사는 강동화 의장과 김원주 위원장을 비롯한 도시건설위원회 의원 등 10명의 의원들이 기린대로 자전거도로 17키로미터 구간을 2시간정도 자전거를 타고 돌았다. 의원들은 전주시공영자전거 '꽃싱이'로 라이딩하면서 불편사항을 공유하고 향후 개선방향을 모색했다. 의원과 담당공무원들은 라이딩 후 간담회를 통해 사업 추진상 애로사항을 청취하는 시간을 가졌다. 김원주 위원장은 "직접 자전거를 타보고 자전거를 이용하는 시민들의 불편을 체감할 수 있는 매우 중요한 시간이 되었다"며, "앞으로 자전거도로 정비와 함께 자전거 이용자를 위한 다양한 정책 강화를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의정활동

도시계획 조례 대표 발의

김원주 의원이 제374회 전주시의회 임시회에서 전주시 도시계획 일부개정 조례안을 대표 발의 하였다. 본 조례안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에 따라 이미 결정된 도시계획시설의 세부시설 변경 시 건축물 연면적 등의 경미한 변경 사항에 대하여 조례로 명확히 규정함으로써 조례 운영상 나타난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이다.

이 조례안의 주요 내용은 이미 결정된 도시계획시설의 세부시설 면적, 건축물의 연면적 또는 높이를 변경하는 경우로서 관계 행정기관의 장과의 협의 및 시 도시계획위원회 심의를 거치지 않고 변경할 수 있는 범위를 50% 미만으로 규정하는 것들을 내용에 담고 있다.



5분 자유발언

지역건설산업 보호대책 필요 업체보호가 지역경제 활성화

전주시에서는 지역업체 하도급 활성화를 위해 2019년에 하도급 관리팀을 신설하고, 민간 대형 건축공사의 지역 하도급 계약률 70% 이상, 지역 자재 구매율 80% 이상으로 각각 높일 계획을 하고 있다. 이러한 전주시의 선도적 대응 노력과 맞물려 지역 건설산업에 대한 특별한 대책 마련을 촉구한다. 첫째, 단기적으로 지역업체 보호 제도를 확대해야 한다. 지역 제한 입찰제도와 지역 의무 공동도급 제도 등 지역업체를 보호할 수 있는 제도를 적극적으로 활용해야 한다. 둘째, 지역 건설업체 수주 시 용적률 인센티브 제도를 적극적으로 도입해야 한다. 지역업체 참여 비율에 따라 용적률을 상향시켜 지역 건설시장의 시장점유율을 높여가야 한다. 지역 관내 건설업체들을 위한 일감확보 지원은 지역건설산업 활성화뿐만 아니라 전주시 지역경제 활성화의 가장 현실적인 동력이 될 것이다.

5분 자유발언

전라감영 2단계 복원 준비하자 후세들 위한 콘텐츠 마련해야

국가관광거점 도시 전주의 위상을 한층 더 강화할 수 있는 전라감영의 지속적인 추진을 위한 국비와 도비 확보를 촉구한다. 전주시는 옛 전라도 수부, 전주의 자존심을 세울 전라감영 재창조 복원 1단계를 마무리하였다. 6년간의 복원과정을 거친 전라감영은 선화당을 비롯한 8개의 상징적인 건물들을 복원했다. 전체 전라감영 복원에서 본다면 1단계 복원은 이제 첫 단추를 끼우고, 옷을 입히는 단계이다. 이제 전라감영은 역사의 향기와 당 시대의 위업들을 재조명하고, 후세들에게 전달할 수 있는 현장감 있는 콘텐츠로 채워 나가야 한다. 전라감영 서쪽 부지 2단계 복원 및 실용적인 공간으로 재구성하기 위한 예산 확보에 전주시가 총력을 기울여야 한다.



풍남,노송,인후3동
최용철 의원



5분 자유발언

전주시 행정구역 조정 합리적 기준 필요 시민의견 반영한 객관적 추진 뒤따라야

행정구역 조정 때마다 주민갈등이 일어나고 있으며, 주민의견 수렴 투표를 통해 객관적인 방법으로 해결해 가고 있다. 앞으로도 과대동으로 송천1동, 평화2동, 서신동, 효자4동 및 인후3동(선거구는 완산구이고 행정동은 덕진구) 재조정은 불가피해질 것으로 보인다. 전주시가 경쟁력 있는 도시로 나아가고 변화하는 시대 상황에 맞게 대처하기 위해서라도 행정구역 경계조정 용역을 재실시할 것을 요청하며 몇 가지 제안을 하고자 한다. 첫째, 행정구역 변동에 대한 공감대가 형성되는 지역을 우선적으로 통합해 행정관리의 일원화와 시민불편을 최소화하고, 행정수요에 맞는 인력 및 행정기구를 정비하고 행정의 효율성을 향상시킬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하여야 한다. 둘째, 행정구역 경계 조정을 통한 지역 내 분쟁 갈등의 원인, 갈등 사례에 대한 문제점을 전수 조사하여 보다 객관적이고 합리적인 갈등 해결 방안을 제시해야 한다. 셋째, 전주시 기준에 맞는 실질적인 검토 절차 합리적 경계조정을 추진하기 위한 구체적인 개선안이 제시되어야 한다. 무엇보다 행정관리 일원화, 생활권과 행정권의 통일, 동일한 정체성 확립 차원에서 시민의 의견이 적극 반영된 합리적이고 객관적인 행정구역 재조정 추진을 거듭 당부한다.



의정활동

전주정신 포럼 패널 참여 “전주사람 자긍심 갖자”

전주시가 역경을 뚫고 아름다운 꽃을 피워낸다는 전주정신 '꽃심'을 닮은 전주인 등을 소개하는 포럼을 열었다. 전주시는 11월 1일 전주역사박물관에서 전주정신 분야별 인물연구를 통해 전주정신 꽃심의 논리적·학술적 기반을 강화하고, 지역의 가치에 대한 대중적 이해를 높이고자 2019 전주정신 포럼 '인물로 본 전주정신- 꽃심'을 개최했다. 이날 포럼은 전주정신 꽃심의 개념과 역사적 인물을 주제로 한 이동희 전주역사박물관장의 기조강연을 시작했다. 이날 꽃심의 4가지 특질(대동·풍류·올곧음·창신)의 관점에서 전주정신에 의미와 가치를 알렸다. 발제에 이어 김승종 전주대교수가 좌장을 맡고 김영무 전민일보 사회부장과 문윤걸 예원예술대학교 교수, 최용철 전주시의원, 홍성덕 전주대학교 교수가 패널로 참여한 종합토론도 펼쳐졌다. 한편 전주시는 전주사람들이 품고 있는 대동·풍류·올곧음·창신 4개의 정신을 아우를 수 있는 하나의 정신인 '꽃심'을 전주 정신으로 선포했다.

서신동
정섬길 의원



5분 자유발언

**전주승마장, 경영개선 시급하다
운영조례 제정, 자마관리 삭제 등 개선을**

전주시설공단은 시설 노후에 따른 개보수비용 등 늘어나는 적자운영을 조금이라도 해소하고자 자마(개인 말) 위탁을 늘렸지만, 결과적으로 실질적인 수입증가보다는 과한 예산지출과 잦은 민원을 초래했다. 이제라도 전주승마장 적자운영에 대한 경영개선과 관련 운영 규정을 개편하여 공공시설로서 제 역할을 할 수 있도록 다음과 같이 제안한다. 첫째, 별도의 '전주시 승마장 관리 운영 조례'를 제정하여 수탁자 선정 및 위탁관리, 사용료 및 강습료 규정 등을 명확히 해야 한다. 둘째, 자마 위탁관리 규정을 삭제하여 공공 체육시설로 운영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셋째, 차별화된 도심 속 승마 체험 프로그램 개발과 시설개선에 필요한 보조금 확보를 위해 농림축산과 체육시설 부서 간의 긴밀한 협조가 필요하다.

5분 자유발언

**청소년 생리대 지원, 보편적 복지 이루자
학교 등에 보건위생용품 비치 필요**

2016년 6월 화제가 된 깔창 생리대 사건을 우리 모두 기억하고 있다. 돈이 없어 생리대를 교체하지 못하고 생리 관련 질병을 얻는 등 생리현상 자체가 고스란히 고통으로 다가왔다. 이후 정부는 만11~18세 저소득층 여성 청소년을 대상으로 생리대 지원을 시작했다. 지원 첫해 생리대 현물을 제공했으나, 2018년부터 상품권 포인트 방식으로 변경되었다. 하지만, 저소득층에 한정된 지원은 가난을 낙인찍고, 변화된 여성 청소년들의 성장 상태를 반영하지 못했으며, 온라인 사용처도 턱없이 부족하다. 이런 한계를 극복하기 위해 공공시설과 학교, 청소년 복지시설 등에 여성 보건위생 용품을 비치하는 게 필요하다. 여성 청소년 위생용품이 선별적 복지 물품이 아닌 생활필수품이자 의료용품인 공공재로서 소득수준과 관계없이 보편적 복지 대상으로 삼아 무상지원해야 한다.

서신동
최명철 의원



5분 자유발언

**일자리 창출로 고향 떠나는 청년 막자
전주시는 기업유치 적극 나서야**

젊은 청년들은 전라북도에서는 살아갈 방안을 찾지 못해 한 달에 1,000명씩 일자리를 찾아 부모 형제와 고향을 떠나고 있다.

그들이 고향을 떠나지 않도록 일자리를 빨리 만들어줘야 하고 취업준비생들에게는 행정적·재정적 지원책을 세워서 꿈과 희망을 안겨줘야 한다. 젊은 세대들이 무너지면 나라와 가정이 망한다는 사실을 잊어서는 안 된다. 더군다나 신종 코로나 19로 인해 기업들이 신규채용을 연기하고 취업설명회마저 취소하면서 취업준비생들은 불안에 떨고 있다. 변변한 기업을 제대로 유치하지 못한 전주시는 적극적으로 기업 유치에 사활을 걸어야 한다. 일자리 창출과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새로운 기업을 유치하는 것은 매우 중요하다. 아울러 우리 지역에 동지를 틴 기업이 더는 떠나지 않도록 세심한 지원과 대책을 아끼지 않아야 한다. 일자리 창출과 취업준비생의 지원을 시정의 최우선 과제로 삼고 모든 행정력을 쏟아야 한다.



5분 자유발언

**노후화 탄성 포장시설 교체하라
친환경 보도블록으로 건강권 찾아야**

전주시 관내 초등학교 부근 인도에 우레탄 및 탄성포장재 시공을 한 곳은 모두 네 곳이다. 이곳들은 단 한 번도 중금속 유해성 검사를 시행한 적이 없으며, 제대로 관리조차 하지 않고 있기에 본 의원은 전주시에 다음과 같이 제안한다. 첫째, 관내 모든 공공시설 탄성 포장시설에 대한 중금속 검사를 시행해야 한다. 둘째, 관내 모든 탄성 포장시설을 전수조사하고, 관리 방침을 세워야 한다. 셋째, 노후화된 우레탄 재질의 탄성 블록은 친환경 보도블록으로 전면 교체하는 정비사업을 추진해야 한다. 안전하게 걷고 싶은 도시 전주가 될 수 있도록 노후화된 탄성 포장시설 문제를 조속히 해결하길 촉구한다.

효자4·5동
박형배 의원



5분 자유발언

**한국탄소진흥원 승격, 미래 대비하자
탄소산업메카 전주 굳혀야**

4월 30일, 탄소 소재법 개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이는 우리 한국탄소융합기술원이 국가 기관인 진흥원으로 승격할 수 있는 길이 열리게 된 것이다. 탄소융합기술원이 진흥원으로 지정될 수 있도록 전주시, 전라북도, 기술원, 정치권은 총력을 다해야 할 것이다. 이에 본 의원은 진흥원 지정의 전후 대응 방안을 다음과 같이 제안한다. 첫째, 전주시와 전라북도 중심의 ‘한국 탄소산업진흥원 대응 협의기구’ 구성을 제안한다. 둘째, 전주시 탄소 산업 종합평가를 추진, 진흥원 설립 후 전주시만의 대응 가능한 중장기 로드맵을 마련해야 한다. 셋째, 전주시의 기업 유치 및 지원을 위한 기업지원센터 설립을 제안한다. 진흥원 설립(지정)을 철저히 준비하여 전주시 탄소 산업발전의 청사진을 다시금 그려나가길 촉구한다.



5분 자유발언

핵심 사업, 예산 확보 절실

1·2차 추경에서 자체 예산 사업이 주를 이뤄 경제 분야에 국비가 확보된 신규 매칭 사업들은 대부분 추경예산에서 제외되었다.

어렵게 따낸 국비확보에 충분한 사업 타당성 검토 절차가 완료된 측면에서 시급한 시 매칭 사업비 확보가 중요하다.

이에 본 의원은 탄소 복합재 신뢰성 평가센터 건립 사업비 20.62억 원을 포함한 국비가 확보된 미 매칭 8건(약 61억 원 정도)의 사업을 면밀하게 검토하여, 향후 진행될 3차 추경에 반영해 줄 것을 촉구한다. 이 제안이 단기적인 지역경제 극복의 가치를 높임은 물론 앞으로 지속해서 투자되어야 할 지역산업 회복의 실마리가 될 것이다.



5분 자유발언

‘전주형 트라이앵글 뉴딜’ 추진하자 시청사 종합경기장 이전 등 균형개발 필요

전주시 청사 이전 및 종합경기장 부지 개발, 대한방직 터 개발 등 전주시 주요 현안 사업의 해결이 시급한 상황이다. 각 현안간 복잡하게 얹혀있는 매듭을 풀고, 전주를 균형 있게 발전시키고 새로운 모습으로 도약 시킬 ‘전주형 트라이앵글 뉴딜’을 제안한다. ‘전주형 트라이앵글 뉴딜’의 첫 번째 꼭지는 전주시 청사를 전주의 심장 터인 종합경기장으로 이전하여 건립하는 것이다. 두 번째 꼭지는 전라감영 확대 복원 및 전주완산경찰서 이전이다. 세 번째 꼭지는 대한방직 터 복합용도개발이다. ‘전주형 트라이앵글 뉴딜’에 대한 적극적인 추진을 위해 TF팀 구성은 제안한다. 전주의 균형감 있는 개발로 새로운 활력을 불어넣어 시끌벅적 청년 전주를 건설해 주길 바라며, 관광거점도시로의 도약을 위하여 본의원이 제안한 TF팀 구성과 전주시의 신속하고 전향적인 대응을 거듭 촉구한다.

의정활동

‘대한방직 터 개발 방향’에 대한 토론 위한 KBS뉴스 이슈K 출연

이미숙 부의장은 7월 1일 KBS 이슈K에 출연해 토론회에서 다음과 같이 주장했다. 전주 발전을 위해 대한방직터 개발 타당성은 있다고 본다. 자금출처를 떠나 전주 발전을 위해서는 사업주가 개발사업을 하겠다는데 막을 이유는 없다고 생각한다. 실지로 자금줄을 대기업이 가지고 있다면 더 불안해할 이유는 없다고 본다. 또, 한옥마을 1000만 관광객 시대가 올지 어느 누구도 예측하지 못했듯이 대한방직 터에 개발하려고 하는 143층 주상복합건물은 지역 대표 명소화 가능성이 충분히 있다고 보며, 코로나 시대에 지역경제 활성화에도 도움이 될 것으로 생각한다. 개발이익 대비 기부 체납하는 비율은 매우 낮다는 의견에 공개공지에 대해서는 개발이 제한되어 있다. 공론화위원회를 통해 시민여론과 공론화 방식을 통해 사업추진 방향설정 및 용지 용도변경을 통해 개발이익금 환수방식 등이 구체화되면 건전한 위원회가 될 것이다.



효자4·5동
채영병 의원



5분 자유발언

**정화조 악취, 대책필요하다
전주시가 정기적인 관리에 나서야**

전주시 2만 1천여 개의 정화조에 대한 정기적인 관리 부족으로 정화조 악취가 발생하고, 이물질이 수시로 범람해 많은 시민들이 불편을 겪고 있다. 현재 전주시 정화조 관리 업무 담당자 1명이 1만여 개의 정화조를 흘로 담당하고 있어 내부청소를 시행하지 않는 시설에 대한 과태료 부과까지는 어려운 실정이다. 담당 인력을 보충하고 '하수관로 정비사업'의 신속한 집행, 과태료 부과 및 대집행을 통하여 전주시가 보다 적극적으로 정화조 관리에 나서주길 촉구한다. 특히, 과태료 부과와 같이 강제성을 동반한 행정 집행은 대상자의 강한 반발을 받을 수 있으나, 이것이 부담스러워 소극적으로 행정 집행이 이루어진다면 더욱더 많은 시민이 불편을 겪을 수밖에 없다. 적극적인 행정 집행으로 정기적인 정화조 관리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해주길 바란다.



의정활동

**효자4동 백마산길 인근 침수지역 개선하자
상습 침수지 근본대책 서둘러야**

전주시의회 채영병 의원(효자4·5동)이 11월 2일 자신의 지역구인 효자4동 백마산길 인근 상습 침수지역 재발방지 대책 마련에 나섰다. 이날 채 의원은 지난 8월 폭우로 피해를 본 백마산길 부근이 상습침수 지역으로 주민들의 안전을 위한 근본적인 대책이 필요하다며 주민들과 함께 전주시에 개선을 요청했다. 이날 현장 점검은 완산구청 건설과, 건축과 등 관계 공무원들과 함께 효자4동 백마산길 인근 상습 피해지역에 대한 정밀조사 등 상황을 살펴보고 수해 재발 방지책 마련을 위해 이루어졌다. 이날 상습 침수지역을 방문한 채 의원은 천잠산 아래의 상습침수지역에서 대규모로 건축 공사중인 현장의 토사가 배수로를 막아 침수피해가 예상된다며 배수로 정비를 요구하는 한편, 장기적으로는 공사장의 경사지에 옹벽을 설치하여 토사 유출을 근본적으로 차단하도록 요구하는 등 세밀한 맞춤형 현장 행정을 펼쳐 지역 주민의 찬사를 받았다.


 호자1·2·3동
김은영 의원
5분 자유발언
**승강기 안전사고 대책있어야
바닥확인 위한 안전스티커 보급하자**

전주시청사와 의회에 설치된 승강기 앞에는 ‘문이 열리면 승강기 안의 바닥을 확인한 후 탑승하시기 바랍니다.’의 내용이 적힌 스티커가 부착되어 있다. 행정안전부가 고시한 ‘승강기 안전운행 및 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라 제작된 스티커는 승강기 이용자들의 주의를 환기하는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다. 우리 시에는 1만 2백여 대의 승강기가 설치되어 있다. 공공시설물 내 승강기는 관리 규정에 따라 관리가 잘되고 있지만, 민간 승강기는 관리가 잘 되질 않아 승강기 이용 관련한 안전사고가 심심치 않게 발생하고 있다. ‘승강기 안전관리법’에 국가는 승강기 안전에 관한 종합적인 시책을 수립·시행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지방자치단체는 관할 구역의 승강기 안전에 관한 시책을 그 지역에 맞게 수립하고 시행하여야 한다고 명시하고 있다. 우리 앞에 멈춰서 열리는 승강기가 100% 안전하다는 보장이 없다. 이용자 스스로 주의해야 할 필요성이 있다는 것이다. 이에, 승강기 바닥 확인을 위한 안전스티커 확대 보급을 제안한다.

5분 자유발언
**시청사 신축 이전 논쟁 그만하자
지금보다 미래보는 행정 필요**

전주시청사 신축에 대한 신중한 자세를 촉구한다. 전주시청사 입지는 유의미한 장소성을 가져야 한다. 현재 시청사 부지는 전라감영, 전주 부성 등과 인접한 역사적 장소로 의미가 있고, 향후 완주 등 시·군과의 통합추진 시 전주시청사는 전주시가 제시할 수 있는 대안이 될 것이다. 현재의 불편함은 인근 건축물을 매입해서 사용하고, 이조차도 어렵다면 2004년 실시한 용역처럼 현 청사의 강당 부분 증축을 고려해야 한다. 현 시청사는 불과 30년을 내다보지 못한 청사계획이었다. 다시는 그런 상황을 재연해서는 안 된다. 특히, 공장 부지, 경기장 부지 개발과 맞물려 시청사 신축 이전을 추진하는 것은 경솔하고, 되돌릴 수 없는 길을 가는 것과 같다. 순간의 선택이 백 년을 불편하게 할 수 있다. 지금보다 미래를 보는 전주시 행정을 기대해본다.



효자1·2·3동
이경신 의원



의정활동

**전주시 공립치매전문병원 설립 공정회 개최
취지에 맞는 조례입안 노력**

전주시의회 복지환경위원회 이경신(효자 1·2·3동) 위원장 및 이남숙(동서학, 서서학, 평화1·2동) 부위원장 주최로 6월 23일 전주시 공립치매전문병원 설립을 위한 정책토론회가 개최되었다. 이날 토론회는 전북대학교 박종일 교수의 주제발표로 진행되었으며, 전주시의회 의원을 비롯, 전주보건소, 병원 및 요양병원, 노인복지 관계자 등이 참석해 다양한 의견을 공유했다. 특히, 이들은 급증하는 치매 노인의 전문적인 치료를 위하여, 공립치매전문병원 설립의 필요성과 이를 위한 정책적 제안들을 함께 논의하였다. 또한, 참여한 기관별로 공립치매전문병원의 필요성 및 진행 현황을 다양한 관점에 따른 의견을 제시하였으며, 공립치매전문병원 설립에 따르는 현실적인 과제들과 해결을 위한 방안들을 심도 있게 논의하였다. 이날 토론회에 참석한 이경신 위원장은 “치매전문병원이 공립방식으로 설립된다 하더라도, 무조건 공공성이 담보되는 것은 아니다”며 “조례를 통해 공립치매전문병원의 공공성을 담보할 수 있도록, 지방의회의 역할에 맞게 조례 입안에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5분 자유발언

**맑은물사업본부 부지, 지역주민에 돌려주자
부지매각 반대, 복합시설 사용**

최근 효자동이 확장되면서 효자 권역의 중심은 효자41·5동으로 쓸림현상이 가속화되고 있다. 기존 효자1·2·3동의 일부 지역은 도심 공동화 현상이 발생하는 등 퇴화 현상을 겪고 있다.

이러한 현실에서 전주시 맑은물사업본부 이전에 대한 주민 반대 목소리는 갈수록 높아지고 있다. 이에 효자동 주민들은 단순 재원 마련을 위해 전주시 맑은물사업본부 이전에 따른 부지 매각을 반대한다. 맑은물사업소 부지는 효자1·2·3동 주민을 위한 행정문화복지복합시설 설치가 가능한 최적지라고 생각한다. 협소한 장소로 질 높은 행정서비스가 어려운 인근 주민센터와 도서관, 문화센터 등이 어우러진 행정문화복지센터를 건립하여 효자동 주민의 삶의 질 향상과 행복지수를 높여야 할 것이다.

삼천1·2·3동
김동현 의원



5분 자유발언

**전주형 공공비축 마스크 제도 도입하자
감염병 재난 효율적 대처 가능**

중앙방역 대책본부에서 정례브리핑을 통해 ‘이제는 완전히 다른 세상으로, 생활 속에서 감염병 위험을 차단하고 예방하는 방역 활동이 우리의 일상’이라고 했다. 이에, 본 의원은 향후 코로나19와 같은 세계적 감염병 재난에 대응하기 위해 공공 비축 마스크 제도의 도입을 제안한다. 전주시가 재난관리자원인 마스크를 미리 체계적으로 비축하고 관리하면 감염병 재난에 효율적으로 대응할 수 있다. 마스크 품귀현상이 발생하였을 때 비축 마스크를 시민들에게 제공, 혼란을 해소하고 공급이 안정될 때까지 유연한 방역체계 확립에 도움을 줄 수 있다. 또 비축한 마스크는 감염병 재난 발생 때뿐만 아니라 미세먼지 경보가 경계 및 심각 등급으로 발령됐을 때도 각 동 주민센터를 통해 배포, 시민의 건강을 지킬 수 있다. 코로나19 사태의 교훈을 빼속 깊이 새겨 또 올 수 있는 더 큰 위기의 선제 대응 측면에서, 지금부터 전주형 공공 비축 마스크 제도의 도입을 적극적으로 검토하여 주길 당부한다.



의정활동

**문화경제 분야 일괄개정조례안 대표발의
조례 입안 원칙 위배 조례 일괄정비**

김동현 의원이 제371회 전주시의회 임시회에서 전주시 자치법규 정비를 위한 문화경제 분야 일괄개정조례안을 대표 발의 하였다. 본 일괄개정조례안은 전주시 문화경제 분야 조례 중 상위법령 위반 사항, 위임 범위 일탈 불일치 소지 사항, 법령상 근거 없는 규제를 규정하고 있는 조례 등 통상적인 조례 입안 원칙에 위배된 조례를 일괄 정비함을 목적으로 하고 있다. 작년 의원연구단체인 조례연구회가 자치법규 정비 용역을 추진, 문화경제위원회 소관 분야 정비 대상 조례가 총 13개로 진행되었으나 담당 부서와 협의한 중 추후 부서 검토 및 현행 유지 사항을 제외한 본 조례 일괄개정안으로 총 4건이 최종 확정되어 발의하게 되었다. 4건의 개정조례안을 설명드리자면 본 조례 제2조에 따른 별표1의 사항은 상위법령 위반 및 위임 범위 일탈 불일치 소지 내용이다. 이는 지방자치법 제22조에 근거한 주민의 권리 제한 또는 의무 부과에 관한 사항 시 법률의 위임이 있어야 함을 근거로 개정한 사항이다.

삼천1·2·3동
김승섭 의원



의정활동

관광거점도시 기획단 운영 간담회
한옥마을 새로운 콘텐츠 개발 대두

김승섭 문화경제위원회 위원장은 8월 11일 관광거점도시 기획단 운영관련하여 간담회를 가졌다.

이날 간담회는 전주시가 글로벌 관광거점 도시로 성장하기 위해 필요한 사업구상과 실행력을 높이기 위한 아이디어를 모색하는 자리가 되었다. 이날 주요 논의사항으로는 한옥마을 2.0 추진방안으로 한옥마을을 리브랜딩하기 위해서 외연확장과 새로운 콘텐츠 개발 및 고급화 전략의 필요성과 획일화 되는 한옥마을의 모습을 경계해야 한다고 했다. 또 문화기반 여행도시 조성, 생태관광도시 조성, 지속가능한 공정여행도시 조성방안 등 주요 사항들이 논의되었다.



5분자유발언

관광거점도시, 깨끗한 도시에 중점
크린하우스 도입과 쓰레기 수거 시스템
개선을

전주시가 국가대표 대한민국 관광거점도시로 선정되면서, 전주의 새로운 청사진이 우리 앞에 펼쳐지고 있다.

한옥마을과 전통문화 브랜드를 갖춘 전주시는 바야흐로 세계적인 수준의 관광도시로 올라설 기회를 잡게 된 것이다.

전주시는 관광거점 도시 조성으로 앞으로 더 많은 관광객이 유치될 것이다. 하지만 본 의원은 걱정이 앞선다. 전주시 곳곳에 쓰레기 문제가 산적해 있다. 많은 방문객이 불법 쓰레기 및 방치된 생활 쓰레기를 본다면, 전주의 이미지에 큰 타격을 줄 것은 불 보듯 뻔하다. 전주형 크린하우스 도입과 같은 쓰레기 수거 시스템의 전면 개선 사업을 적극적으로 검토해 줄 것을 강력히 촉구한다.

삼천1·2·3동
김현덕 의원



의정활동

**코로나19 대응 위한 예산 지원 뒷 받침
코로나 극복에 행정력 집중지원**

전주시의회가 코로나19 대응을 위한 긴급 예산심의에 들어가기로 했다.

전주시의회는 6일 운영위원회를 열고 코로나19 발생에 따른 시민피해를 줄이고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오는 10일부터 4일간 임시회를 열고 전주시가 긴급편성한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심의하기로 했다.

이번 3월 임시회는 당초 20일부터 27일까지 8일간 열릴 예정이었으나 회의를 앞당겨 10일부터 13일까지 4일간 일정으로 축소 운영하기로 했다. 전주시가 제출한 주요 예산은 소상공인 상생(공공요금) 지원, 소상공인 특례보증 지원, 중소기업육성기금 확대 등 소상공인·중소기업 지원 예산과, 방역 소독약품 및 물품구입, 코로나19 생활지원비 지원 등 방역대책 및 취약계층 지원 예산 등이다. 김현덕 운영위원장은 “코로나19 방지에 행정력을 집중할 수 있도록 의사일정을 짜임새 있게 운영해 업무 공백을 최소화할 계획이다”고 말했다.



의정활동

**민간단체 보조금 주면서도 지도감독 소홀
철저한 관리, 예산 퍼주기 말아야**

김현덕 의원이 제376회 제2차 정례회의 행정사무감사에서 전주시가 예산을 지원하는 시정발전연구원과 정책자문단 같은 행정보조기관이나 단체가 서로 업무가 중복되고 방만하게 운영되고 있으며, 지도감독은 부실하다고 지적했다. 또, 지원단체의 업무 성격상 중복되고 직원들과의 갈등도 발생한다고 했다. 민간단체 보조금과 다율마당 운영도 비슷한 상황이라고 했다. 전주시 민간단체 보조금은 88개 수탁기관에 총 685명이 종사하고 있으며 한해 예산이 394억이 지원되고 있으나 이들에 대한 지도감독은 소홀하기 짝이 없다고 하였다. 전주시의 감사자료조차 제대로 된게 없으며, 예산 퍼주기식이라고 지적했다.



시정질문

근대 문화 유산 활성화 시급 전주한지 유네스코 세계문화 유산 등재 나서야

전주 전통문화 콘텐츠 중 가장 역사성이 오래된 것은 전주한지다. 전주시도 전주한지 세계화를 위해 노력해왔고, 해외에서 주목받는 등 구체적 성과가 나타났다. 하지만, 시설 위주의 인프라에 집중하고, 한지장인 육성에 소홀한 점은 매우 아쉽다. 전주시가 전주한지 유네스코 세계문화유산 등재를 위해 선도적 역할을 해야 한다. 한지 세계문화유산 등재를 위한 사업 진행 상황, 전주시의 계획을 밝혀 달라. 우리는 이제 근대문화 유산 활성화에 적극적으로 관심을 가져야 한다. 근 20여 년 동안 전주시는 조선왕조 발상지로서 역사 문화자원 복원과 발굴에 집중해 왔다. 그러나 인천·군산·목포·부산·서울은 근대문화 유산을 복원하였고, 목포와 군산은 관광도시로 크게 성장하였다. 전주에도 건축자산, 거리, 마을, 산업단지, 전쟁 유산 등 근대문화 역사 자원이 수두룩하다. 전주시의 근대문화 재발견을 위한 자체 노력을 기대하면서, 전주시의 근대문화유산 활성화에 총괄적 답변을 요구한다.



시정질문

시립미술관 건립에 전문가 공존화 필요 특색있는 백년 대계형 미술관 기대

지역의 숙원 사업이었던 전주시립미술관 건립이 제대로 진행되고, 전주만의 특색을 갖기 위해 전주시에 몇 가지를 제안한다. 우선, 예산확보에 있어 행정절차가 미흡하다. 또, 전문가 간담회와 공론화 과정을 지역의 3~4명 소수 인사끼리만 편협하게 진행하고 있어 다양한 시각의 전문성 확보가 우려된다. 학예사, 전공 교수, 예술복지 치유상담사, 미술사학자 등 미술사, 예술경영, 건축, 조경을 아우르는 다분야 전문가들이 함께 공론화에 참여해야 한다. 미술관의 지향점부터 이에 따른 작품 구매·수장 기준, 전주지역 공·사립 미술관 연계, 야외형 미술관 가능성, 장소 마케팅 방안 등의 조사나 논의도 필요하다. 앞으로 전주시의회와의 유기적 간담 및 정책토론회를 통해 특색 있는 전주형 미술관을 만들어 백년대계형 미술관이 되길 바란다.



송천1·2동
김윤권 의원



5분 자유발언

**천마지구 개발, 생태도시 기준돼야
녹지공간과 시민 중심 도시개발 필요**

천마지구 도시 개발과 관련하여 몇 가지를 제안한다. 첫째, 대규모 녹지공원을 조성하여 전주대대를 시민 품으로 돌려줘야 한다. 시민들이 원하는 녹지공간은 세병호와 같이 가족들과 함께 시간을 보낼 수 있는 공간이다. 천마지구 역시 건지산과 연계되는 호성동과 송천동, 북부권 시민들의 자랑이 될 대규모 녹지공원 조성이 필요하다. 둘째, 대규모 주택공급의 필요성에 대한 고민이 필요하다. 공동주택 중심의 도시개발이 아닌 녹지공간과 시민 편의시설 중심의 도시개발 추진을 요청한다. 아이가 안전하고 행복한 공간, 주말에 가족과 함께 공원을 누비며 휴식을 취할 수 있는 환경, 주거 공급 중심이 아닌 공동체가 회복되는 새로운 주거 생태계를 만들 수 있는 공간으로 천마지구 도시개발 사업이 진행될 수 있도록 힘써주길 바란다.



5분 자유발언

**'유니버설 디자인' 도시 만들자
시민 안전과 친환경 우선**

차도와 보도는 모든 사람에게 편리함과 동시에 안심하고 왕래할 수 있어야 하며, 보행을 포함한 다른 교통수단을 이용할 때도 원활하게 통행할 수 있어야 한다. 전주시는 누구나 안전하고 편리하게 생활할 수 있는 전주를 만들기 위해 크고 작은 사업을 집행하고, 도시계획을 수립하면서 '우선적인 기준'을 마련해야 한다. 다양한 상황을 고려하고, 남녀노소 장애 유무에 상관없이 모두가 편하게 살아갈 수 있는 도시를 만드는 철학이 필요하다. 세계 곳곳에서는 '나이, 성별, 국적 및 장애 유무 등과 관계없이 모든 시민이 안전하고 편리하게 생활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드는 '유니버설 디자인'에 대한 관심이 높다. 전주시 역시 도시계획과 사업 전반에 이런 철학이 필요하다.

송천1·2동
김진옥 의원



5분 자유발언

일자리 창출 위한 적극 행정 시급
규제 풀고 토지제공으로 기업유지

코로나19 장기화로 인해 내수 경기는 갈수록 둔화하고 있고, 국내 투자 및 기업환경은 그만큼 경쟁력을 잃어가고 있다. 각종 사회안전망 구축도 필요하지만, 더욱더 장기적이고 근본적인 해결책이 필요하다. 전주시도 전주시 기업 활성화 조례와 투자유치촉진 조례에 대한 전면적인 재검토를 통해, 모든 정책에 우선하여 기업 유치와 기존기업의 증설 통한 일자리 창출이 이루어지도록 적극적인 행정을 펼쳐 주기를 바란다. 전주시민들에게 좋은 일자리만 제공할 수 있다면, 규제도 풀고, 산단 내 지구단위 계획도, 지구지정도 재검토하고, 필요하다면 토지도 제공하고, 도로나 상수도 시설이 필요하다면 개설하고 기타 정주 여건 마련에 필요하다면 해결해 주어야 한다.



의정활동

대중교통활성화 정책 토론회 개최
기업·정치권 등 사회적 노력 동반 되어야

전주시의회 의원연구단체인 생태교통연구회(회장 김진옥 의원)가 10월 28일 전주시의회 소회의실에서 대중교통의 편리와 접근성을 높이기 위한 '지속가능 교통물류체계로서 대중교통활성화 토론회'를 개최했다. 이날 토론회는 해마다 급증하고 있는 전주시의 자동차가 대중교통 흐름에 영향을 주고 시민불편을 초래, 이에 대한 대책 등을 논의하기 위해 마련됐다. 전주시는 매년 평균 10,000대씩 자동차가 증가하고 있어 인구 66만 명에 31만 여대가 등록되어 차량 증가에 따른 정체현상 등 대중교통 이용 불편을 초래하고 있다며, 대중교통 활성화를 위한 특단의 조치가 필요한 실정이다. 이번 토론회에서는 전주시 지속가능교통물류체계 구축을 위해서는 대중교통 무탄소 활성화, 기후변화 문제 등 생태교통에 대한 시민의식 향상이 매우 중요하고 이를 위해서는 교통행정뿐 아니라 시민사회단체, 기업, 정치조직 등 전 사회적인 노력이 동반되어야 한다는데 의견을 모았다. 연구회 회장인 김진옥 의원은 "이미 전주시의회는 '전주시 지속가능 교통물류체계 기본조례' 제정을 통해 대중교통활성화를 위한 토대를 마련했다"며, "이번 시민참여형 토론회를 통해 정책발굴과 정책적 대안으로 실현되기 바란다"고 말했다.



의정활동

투명하고 효율적인 예산 주문 결산검사 대표위원 활동

전주시의회가 2019회계연도 결산검사 대표 위원에 강승원 의원(덕진, 팔복, 조촌, 여의동)을 임명하고 결산검사에 들어갔다. 시의회는 4월 10일 결산검사 위원에 강 의원을 비롯하여 회계 및 재정 관련 분야에 식견과 경험이 풍부한 前 시의원, 세무사, 회계사, 전직 공무원 등 총 5명을 검사위원으로 임명했다. 이날 임명된 결산검사 위원은 4월 10일부터 4월 29일까지 20일간 2019회계년도 전주시 재정규모 1조 8천여 억원의 일반회계와 공기업 특별회계, 기타 특별회계 등 세입·세출, 기금, 채권, 채무, 공유재산 등에 대한 결산검사를 실시하여 예산집행의 투명성 및 타당성 등을 종합적으로 검사할 계획이다. 대표 위원으로 임명된 강 의원은 “전주시의 재정운영 성과를 면밀히 검사하여 예산이 투명하고 효율적으로 집행 되었는지 철저하게 검증할 것이다”며 “시민의 혈세가 불필요한 예산 낭비 없이 제대로 집행되었는지 시민의 입장에서 검사를 실시하겠다”고 말했다.

의정활동

주민복지증진 및 숙원사업 감사패 하가 휴먼빌 아파트

전주시의회 강승원 의원(덕진, 팔복, 조촌, 여의동)이 10월 28일 덕진구 덕진동 소재 하가 휴먼빌 2차 아파트 주민들로부터 주민복지증진 및 주민숙원사업 해결에 기여한 공로로 감사패를 받았다. 하가 휴먼빌 2차 아파트에서는 두 의원이 바쁜 의정활동에도 불구하고 평소 주민복지증진을 위해 불철주야 노력하였으며, 특히, 주민들의 숙원사업인 아파트 후문 좌회전 신호 설치 등 주민 안전 확보에 기여한 공로로 주민들의 감사한 마음을 담아 감사패를 수여한다고 밝혔다. 의원들은 “의원으로서 지역 주민 복지증진을 위해 일하는 것은 당연한 것인데 이렇게 뜻깊은 상을 받게되어 감사드린다”며 “앞으로도 주민과 소통하여 지역 숙원사업 해결을 위한 의정활동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덕진·팔복·조촌·여의동
송상준 의원



의정활동

**여의동 지역농산물 팔아주기 나서
수익금은 사회복지 공동모금회 기부**

전주시 덕진구 여의동(동장 한중희)에서는 4월 28일 지역 농가를 돕기 위해 '우리지역농산물 팔아주기'운동을 펼쳤다.

여의동 자생단체연합회(회장 이은기) 주최로 열린 이날 행사에는 200여 명의 주민이 동참해 높은 호응을 보였다. 이날 행사는 코로나 지역확산 방지를 위한 사회적 거리두기 실천으로 사전홍보를 거쳐 철저한 사전주문과 드라이브-스루식 판매를 병행해 최대한 사람들이 모이지 않고 짧은 시간에 안전하게 농산물을 구입하도록 진행됐다. 또한, 판매가는 경매가로 출하한 농산물에 10%를 더한 가격으로 수익금은 전액 사회복지공동모금회에 기탁할 예정이다. 사전주문만 유기농 얼갈이, 유기농 근대, 백하수오, 딸기, 감자, 파프리카 등이며 당일 판매분을 합치면 약 600만원의 판매실적을 기록했다.

의정활동

**팔복동 자생단체와 코로나 방역
버스승강장 등 다중이용시설 소독**

팔복동 주민자치위원회, 자율방범대, 새마을지도자, 청소년지도협의회 등 자생단체 회원들은 3월 4일 코로나19 재확산 방지를 위해 관내 일제방역을 실시했다.

인근상가 및 버스승강장 등 다중이용시설에서 사람들의 이용이 많은 시설에 대해 중점적으로 소독을 했다. 송상준 의원은 "작게나마 힘을 모은 이번 방역봉사가 지역사회의 도움이 되어 하루 속히 코로나가 종식되길 바란다"고 했다. 이어 흥의찬 팔복동장은 "코로나 확산중에도 방역봉사를 위해 동참해주신 자생단체 회원님들께 감사드린다"며 "주민들이 불안해하지 않도록 감염병 예방에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덕진·팔복·조촌·여의동
송영진 의원



시정질문

**미흡한 행정이 에코시티 대형마트 문제유발
주민피해, 더이상 이런 일 없어야**

전주시는 2016년 9월, 상인·에코시티 입주자 등을 대상으로 '대형유통점 입점에 따른 지역 파급력 분석 및 상생 모델 구축 연구용역'을 실시했다. 이 용역 결과를 근거로 전주시는 대형마트 입점을 허용하되 창고형은 불허한다는 조건부 변경을 진행했다. 이후 다섯 차례 매각이 진행된 끝에 최종 한 곳이 선정되었다.

하지만, 매수인의 사업추진 불이행, 규모 축소, 심사위원회 구성 적절성 등 여러 의혹을 낳았다. 지역 숙원사업인 대형마트 입점이 드디어 가시화되었다. 하지만 그 과정에 여러 의혹과 미흡한 행정으로 직접적인 피해를 본 분들은 바로 에코시티 주민들이다. 그분들의 불편함과 허탈함, 깊은 한숨 섞인 한탄을 우리 모두 깊이 되짚어 반성해 봐야 할 것이다.



5분 자유발언

**만성지구 기지제 연결 생태통로,
원안대로 추진하라**

2017년, 전주시는 친환경생태도시 조성 계획을 발표하며 만성지구 신도시 개발 효과를 극대화하는 방안을 발표했다. 이에 따라 기지제와 지구 내 근린공원을 연결하는 생태통로 3개소를 설치하려 했다. 하지만, 두 차례 전주시 경관위원회 심의를 통해 생태 육교 구간을 횡단보도로 설치하라는 결과가 나왔다.

생태통로와 보행통로의 목적이 명확하지 않다는 이유에서다. 하지만, 본 의원은 생태통로 사업의 취지가 경관위원회 심의에 제대로 반영이 되었는지 의심스럽다. 현재 횡단보도 설치 구간에 대한 지역민의 반감은 커져만 가고 있다. 만성지구 생태통로 설치 사업의 검토 및 재추진을 통해 기지제가 더 많은 사람이 찾는 전주의 명품형 수변공원으로 자리 잡길 간절히 바란다.

진북, 인후1·2동, 금암1·2동
김호성 의원



의정활동

**인후2동 손소독제
300개 기증식 참여**

전주지역 공예전문 나비평생교육원(원장 흥미진)은 3월 6일 인후2동을 방문, 범시민운동인 착한 소독운동에 참여하는 차원에서 손소독제 300개를 기증했다.

또한, 흥원장은 경력단절 여성들을 위한 재취업 및 창업을 위한 전문공예교육원을 운영하고 있으며, 학구열도 높아 현재 우석대학교 미용경영 석사과정에 재학중으로 천연비누, 공방창업반 등 다양한 교육과정도 진행하고 있다.

흥 원장은 현재 인후2동 주민자치 위원이기도 하며, 평소에도 관내 지역아동 및 관내 어르신을 위해 공예체험활동 지원뿐만 아니라 남다른 열정으로 주민자치위원으로 활발한 활동을 하고 있다.



의정활동

**전북은행 '시민쉼터형
예술있는 버스승강장' 기증식 참여**

JB금융그룹 전북은행(은행장 임용택)은 2월 13일 전북은행 본점 앞에 위치한 버스승강장을 '시민쉼터형 예술 있는 버스승강장'으로 조성해 전주시에 기증했다.

국가관광거점도시인 전주의 곳곳에서 예술을 접할 수 있는 지붕 없는 미술관을 조성 중인 전주시에 '예술 있는 승강장 조성사업'에 지역 기업이 동참한 경우는 전북은행이 처음이다.

'시민쉼터형 예술 있는 승강장'은 현대적인 외관과 함께 탄소섬유로 제작된 발열의자와 에어커튼, 음수대, 미니도서관 등의 편의시설을 갖추어 춥거나 더운 날씨에도 시민들에게 쾌적함을 제공하려는 전북은행의 마음이 담겼다.


 진북, 인후1·2동, 금암1·2동
박선전 의원
5분 자유발언
**종합경기장에 시청사 이전하자
관상복합개발 방식 타당**

1983년 준공된 전주시청은 건물과 부지가 협소해 근무 중인 공무원들과 시청을 찾는 시민들에게 큰 불편을 주고 있다. 청사 신축의 근거인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에서 정한 기준 면적에 훨씬 못 미친다.

전주시는 부족한 업무 공간 확보를 위해 인근 현대해상빌딩과 대우증권빌딩 일부를 임대해 사용하고 있으며, 이에 따라 민원인들의 혼란은 물론 사무실 임대료 및 관리비, 직원 외부주차장 임대료로 10억 원 가까이 사용하고 있다. 최근 전주시는 전주종합경기장 개발을 본격화하고 있다. 협소한 시청사 이전의 최적지가 종합경기장임을 고려할 때 본격적인 종합경기장 개발 계획을 수립하기 전에 시청사 신축 이전을 적극 고려해야 할 것이다. 일명 '관상복합개발'로 불리는 공공 소유의 관공서 공간 일부를民間에 임대해 관공서와 상가가 같은 건물에 들어가는 복합 건물로 개발하는 방식도 고려해야 할 것이다. 관상복합 청사는 재정이 부족해도 건물을 지을 수 있고, 일정 수준의 임대료까지 얻을 수 있는 이로운 점이 있으며, 공공 위탁으로 개발해 민자 사업이 갖는 공공성 문제에도 자유로운 편이다. 전북의 중심도시, 천만관광도시, 특례시를 꿈꾸는 전주시청사가 공무원과 시민의 사랑을 받는 곳으로 만들어 지길 바란다.

5분 자유발언
**모래내 전통시장, 특색있게 정비하자
점포별 천막 등 정비시급**

모래내 시장은 현대화사업을 추진했음에도 아직도 무질서하게 설치된 점포별 천막 등 정비가 시급한 상태다.

최근 중소벤처기업부에서 추진했던 전통시장 시설현대화사업의 일부 사무가 지방자치단체로 이양 결정되었다. 이에 따라 당장 올해부터 지방비 부담에 따른 사업축소 우려 속에 예산확보를 위해 능동적이고 선제적인 대응이 어느 때보다 필요하다. 본격적인 시설현대화사업을 진행하기 위해서는民間 자부담 10% 외에 지방비 90% 확보가 관건이며, 전주시의 보다 적극적인 행정력이 필요하다. 더불어, 코로나19로 중앙·남부·모래내시장에도 비대면 온라인 배송시스템 도입에 필요한 기반구축 비용이 지원된다. 일반 전통시장과 다른 정체성을 확립, 모래내시장 특유의 개성을 살려야 한다.





5분 자유발언

디지털 성범죄 지원시스템 구축하자 의료, 법률 지원 등 원스톱 체계 시급

날로 악랄해지고 다양한 수법으로 전개되는 디지털 성범죄에 대해 현실적인 지원체계 구축이 조속히 필요하다. 범죄의 변화 속도는 법을 뛰어넘고 지원체계를 마련하려면 이미 늦어버릴 정도로 빠르게 변화하고 있다. 디지털 성범죄 피해자들이 가해자의 불법 촬영물 유포에 대한 공포와 주변 사람들이 피해 사실을 알게 되는 것에 대한 두려움이 커서 0사건이 발생하더라도 신고가 이뤄지거나 적극적으로 대응하기 어렵다. 또, 지역 전문 상담 인력이 없어서 피해를 호소하더라도 서울에 가서 상담을 받아야 한다. 전주시도 디지털 성범죄 지원시스템을 마련하여 의료, 법률 지원을 포함한 원스톱 체계를 구축해야 한다.



5분 자유발언

기후 위기에서 기후 재난 대응 필요 관련기업 유치와 연구지원 확대해야

기후 재난은 더는 외면할 수 없는, 이미 우리가 겪고 있는 재난이다. 그러나 지금까지 기후 위기는 국가의 문제로 치부되었고, 지자체에서 장기적 계획을 수립해 기후 위기에 대응해오지 못했다. 다행히 전주시가 빅데이터를 활용해 대기오염 대책 등을 마련하고 있다. 본 의원은 전주시가 마련한 정책 이외에 몇 가지를 새로 제안하고자 한다. 첫째, 배달음식점에서 배출되는 플라스틱이나 스티로폼 용기를 친환경 대체품으로 바꿀 수 있도록 권장하고, 대체품으로 변경할 경우 차액을 전주시가 지원해야 한다. 둘째, 택배를 이용하는 포장 용기를 친환경으로 교체하려고 하는 사업장을 지원해야 한다. 마지막으로, 전주시 산단에 이와 관련된 기업을 유치하고, 연구지원을 확대해야 한다.

우아1·2동, 호성동
서윤근 의원



5분자유발언

**고용유지지원금 노동자까지 확장
고용불안과 일자리 위기 지속**

코로나 19라는 초유의 비상사태를 맞이하였지만, 국가와 지방정부 그리고 시민들의 노력으로 감염증 확산 기세는 꺾여가고 있다. 하지만 고용불안과 일자리 위기는 시민들의 삶에 직접적인 타격을 가하는 중대한 위협 요소로 다가오고 있다. 고용노동부에서 발표된 통계자료를 보면 3월 기준 실업수당 지급액은 전년 동월 대비 40.4% 증가, 작년 한 해 동안 1,500여 건의 고용유지 지원금 신청 건수는 올해 벌써 50배 가까운 증가 추이를 보인다. 이러한 비상시국에서 전주시가 '해고 없는 도시 상생 선언'을 통한 일자리 지키기와 고용유지 지원정책에 선제적으로 나선 것은 참으로 의미 있고 모범적인 지방정부의 역할 찾기라 할 수 있다. 코로나19는 전 국민을 위협하고 있지만, 그 피해는 영세소상공인 그리고 특수고용 노동자 등 취약계층 노동자들에게 가장 치명적으로 나타나고 있다. 고용유지 지원금 신청 주체를 사업자뿐만 아니라 노동자까지 확장하는 새로운 발상과 대안도 마련해야 한다. 또 고용유지 상황실의 행정인력도 대폭적으로 확장되어야 한다.



5분자유발언

**공공형 임대 주택 늘려라
주택보급률 110% 중대형 APT 지양**

2018년 국토교통부 장관이 지정·고시한 전주역세권 공공 지원 민간임대주택 공급사업의 주택공급계획에서는 총 7,834호 중 5,558세대를 공공형 임대아파트로 짓게 했다. 전주시는 이러한 전주역세권 개발에 반대하면서 오히려 3,000세대 규모의 중대형 민간분양아파트를 짓는 천마지구 도시개발 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주택보급률이 110%가 넘는 전주에는 더는 중대형 민간아파트가 없어도 된다. 주거비용 때문에 식료품비를 줄여야 하는 가난한 시민들을 위해 공공형 임대주택을 더 늘려나가야 할 것이다.

비례대표
박윤정 의원



5분 자유발언

북부권 생활체육시설 확대를 촉구한다

전주시의 정치, 경제, 사회, 문화생활 등 많은 영역에서 변방으로 취급받던 교외 지역이 신도시 건설과 재생을 통해 이젠 전주시 성장의 중심에 서고 있다. 하지만 여전히 시민들의 삶의 질은 하락하고 있어 이에 대한 대책 마련이 필요하다. 도시를 개발하면 도로, 행정편의, 상업시설, 교육 여건 등 기반시설이 필요하다. 현재 송천동을 비롯한 개발지역은 생활체육시설 부족 및 높은 시설 사용료로 인해 이웃 지자체에 원정을 가야하는 상황까지 발생하고 있다. 송천동 에코시티의 경우 주민들은 기무사 부지에 대한 생활체육 시설 등 공공시설로 활용을 요구하고 있다. 인접한 대규모 공동주택단지와 함께 최적의 장소로 꼽고 있다. 북부권 주민들의 정주 여건 개선을 위한 전주시의 노력을 촉구한다.



의정활동

송천1동 새마을부녀회, 취약계층 김장나눔행사 참여

지난 11월 13일 거동이 불편한 취약계층을 위해 송천1동 새마을부녀회에서 사랑의 김장나눔 봉사활동을 전개했다. 이날 부녀회 회원들과 함께 박윤정 의원은 봉사활동에 참여해 김장을 담궜다. 봉사자들은 정성으로 버무린 맛있는 김장김치 100포기를 관내 소외계층 30여 세대에게 전달하면서 따뜻한 사랑과 온정을 나눴다. 이날 봉사는 새마을부녀회 회원 100여명이 참여했으며 참여자 모두 방역수칙을 철저히 준수하며 진행했다. 박 의원은 “나눔의 따뜻한 마음을 전하는 봉사활동에 동참하게 되어 매우 기쁘다”고 말했다.



비례대표
이윤자 의원



5분 자유발언

'멘탈데믹' 대비 자살예방센터 설치 시급 체계적인 자살예방센터 구축해야

전주시 자살예방센터 설치를 통하여 코로나19 이후 다가올 멘탈데믹 (mentaldemic, 국민 트라우마 확산)에 대비해야 한다.

전주시 자살률은 꾸준한 증가 추세를 보이다가 현재는 전국 평균을 앞섰다. 최근 서울시에서 개최한 세미나에서 중앙자살예방센터장은 펜데믹 이후 자살률에 주목할 필요가 있음을 경고했다. 재난 이후 지연된 자살이 축적된 상태에서 폭발적으로 증가하는 이른바 '멘탈데믹'이 도래할 수 있다는 것이다. 앞으로 도래할 '멘탈데믹'에 대비하여 자살예방센터 설치 및 체계적인 자살 예방 시스템을 구축해야 한다.

의정활동

전주시 저출산 대응 정책 간담회 장·단기 로드맵 대책 필요



전주시의회 의정포럼 연구회에서는 9월 23일 전주시 저출산 대응을 위한 정책 간담회를 가졌다. 출산 문제는 한국사회 전체의 문제이기도 하지만 지방자치단체 차원에서도 심각한 문제로 인식되고 있으며, 전주시의 경우 출산율이 0.95명으로 전국 출산율에 비해서도 낮은 출산율을 기록하고 있어 매우 심각한 상황이다. 이에 전주시의회 '의정포럼'연구회 이윤자 사무국장은 전주시 저출산 정책에 대한 체계적인 대응 방안을 마련하기 위하여 “전주시 저출산 대응을 위한 정책방안 연구”를 한일장신대학교 산학협력단(연구책임자 : 최혜정 교수) 연구용역을 발주하였다. 이에 대한 연구결과에 의하면 전주시는 1992년부터 2019년까지 27년 동안 약 12만명의 인구만 증가하여 인구 정체되고 있는 양상이며, 출생인구와 사망인구가 거의 비슷하여 인구의 자연증가는 매우 미약한 상황임을 확인하고 있다. 전주시는 향후 저출산 대응을 위한 패러다임 전환과 장·단기의 로드맵을 만들어 저출산 문제에 적극 대응해야 함이 매우 필요한 상황이다.

비례대표
한승진 의원



상임위 발언

**체육계 갑질 및 폭력 개선 방안 필요
4대 폭력 예방 교육 나서야**

체육계 갑질 및 폭력예방에 대한 문제가 2013년에는 야구부 문제가 한 번 있었고 18년도에는 빙상계에 있었고 또 작년에는 체육계에서 여러 가지 성폭력, 미투 사건이 대두되면서 계속 체육계에 문제가 제기됐다. 전주시 직장운동경기부가 세 개가 있다. 태권도부는 96년도에 창단해서 감독 포함해서 7명, 수영부는 98년도에 창단해서 8명, 사이클부는 7명으로 구성되어 있다. 2013년도부터 체육계 선수들에 대한 문제 제기가 지속되어 확인해 보니 전주시는 직장운동경기부 창단 이래 선수단 내에 인권 실태조사, 성희롱·성폭력 4대 폭력에 대한 예방 교육이 진행이 단 한 차례도 이루어지지 않았다. 사각지대에 놓여있는 것이다. 논란이 되는 입단 계약서와 서약서에 “갑의 해석에 따른다” 문구 자체 등 갑질 및 폭력예방을 위한 적극적인 개선 방안을 강구해주길 바란다. ‘故 최숙현’ 선수 사망사건과 같은 비극이 전주시에서는 일어나지 않도록 노력해주길 바란다.



5분 자유발언

**코로나 극복 예산 선택과 집중
소중한 예산, 소중한 곳에 사용해야**

2021년 예산은 코로나19 위기 극복에 선택과 집중이 되어야 하고, 2020년 미집행 되었거나 연기된 행사성 예산 등과 관련, 몇 가지 제언을 하고자 한다. 첫째, 지역 문화·예술·관광업계에 대한 빠른 대처가 필요하다. 둘째, 우리는 시민 체육대회 통합 개최와 같은 선례를 남겨 중복성 예산 지출을 최소화한 좋은 선례를 지니고 있다. 위기 극복을 기준으로 우선순위가 낮거나 성과, 집행 부진 사업은 과감하게 축소하거나 폐지를 검토해야 한다. 셋째, 강도 높은 지출 구조조정의 하나로 보조금 등의 정비를 추진하고 이를 위한 세부 기준마련이 필요하다. 소중한 예산이 더욱 소중한 곳에 쓰일 수 있도록 이번 위기를 기회로 여겨 본격적인 체질 개선이 필요하다.



시정질문

청소 위탁업체 감사원 감사청구하라 올바른 청소행정 도입해야

청소노동조합은 시민 혈세를 낭비하는 청소행정 민간위탁을 폐지하고, 전주시의 직접 고용을 요구하며 천막농성을 했다. 이어 전주시와 ‘범시민 연석회의’라는 논의기구를 구성하기로 노조 측과 합의하였다. 그러나 연석회의 구성원에 애초 시의원 2인을 추천키로 했으나 배제된 이유는 무엇인지, 연석회의를 효율적으로 운영하고자 하는 의지는 있는지 답변 바란다. 또, 12개 청소대행업체의 간접인력에 대한 근로계약서 자료 요청을 하자, 마치 약속이라도 한 듯 개인정보 제공에 동의하지 않거나 자료를 축소해서 제출하였다. 문제해결을 위해 주식회사 토우와 협의하는 과정에서 전주시는 대표이사와 협의하지 않고 대표이사 남편과 열두 차례 이상 협의하였다. 이를 정상적인 행정 행위라고 판단하는지 답변 바란다. 또, 2017년 생활폐기물 수집·운반 대행 계약 집행과정에서 허위사실이 공문서에 적혀있고, 회계 질서를 문란케 한 내용이 있다. 이에 대해 전주시가 감사원에 직접 감사청구를 하길 바란다.

의정활동

공공용 100ℓ 종량제 봉투 제작 일반용 50ℓ, 공공용 100ℓ 개정

허옥희 의원이 제375회 전주시의회 임시회에서 전주시 폐기물 관리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을 대표 발의 하였다. 전주시의회에서는 지난 2월에 청소노동자들의 고충을 조금이라도 덜어주기 위해 100ℓ 대용량 쓰레기 종량제 봉투 제작을 제안하는 개정안을 통과시켰다. 그러나 최근 들어 가로환경미화원들의 정비활동 과정에서 불편이 발생하였다. 이에 공공용 종량제 봉투에 한하여 100ℓ 대용량 종량제 봉투 제작을 가능하도록 개정하고자 한다. 본 조례안의 주요 개정 내용으로는 제15조제3항에 최대 50ℓ로 명시되어 있는 상향기준을 공공용은 100ℓ, 일반용은 50ℓ로 변경하여 공공용에 한하여 최대 용량을 완화하였다.



지방의회 체험교실 운영

전주시 관내 초등학생 대상,
풀뿌리 민주주의 체험 기회 제공



전주시의회는 미래 민주주의와 지방자치를 이끌어 갈 초등학생들에게 주인의식을 함양하고, 민주주의를 체험할 수 있도록 어린이의회 체험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다. 본 프로그램은 지난 2007년부터 전주시 관내 초등학생(4학년~6학년)과 중학생들을 대상으로 운영되고 있다.



어린이의회 체험교실은 지방의회의 역할과 기능, 홍보 동영상 관람 및 설명, 3분 자유발언, 퀴즈풀이, 의회청사 견학 등의 프로그램을 통해 지방의회를 체험하게 된다. 체험교실은 갈수록 교사와 참여 학생들로부터 큰 인기를 끌고 있으며, 전국 지방의회 우수 사례로 타 지역 지방의회의 벤치마킹 대상이 되고 있다. 어린이의회 체험교실은 매년 학기 초 교육지원청 또는 전주시의회를 통해 신청하면 참여할 수 있다.

문의 ☎ 230-3731

전북 시·군의원, 전국 최초로 권역단위 지방의회 청렴교육 수료

순창서 14개 시군의회, 국민권익위 청렴 교육 통해
지역 리더로 청렴문화 정착에 앞장



국민권익위원회(위원장 박은정, 이하 국민권익위) 소속 청렴연수원과 전북 시군의회의장협의회(회장 박병술 전주 시의회의장)은 지난 6월 15일 전북 순창군 건강장수연구소에서 전국 최초로 권역단위 지방의회 청렴교육을 실시했다.

이날 교육은 전북시군의회의 전반기 의정활동 마감과 7월부터 시작하는 후반기 의정활동을 앞두고 시민들에게 신뢰받는 의회, 지역사회의 청렴 리더로 거듭나 풀뿌리 지방자치를 정착 시키자는 취지에서 마련됐다.

전북권역 14개 시군의회 의원 전원은 전북시군의회의장협의회가 국민권익위 청렴연수원을 초청해 실시한

맞춤형 청렴교육을 통해 청렴 의지를 다지는 시간을 가졌다.

국민권익위 청렴연수원이 마련한 이번 청렴 교육은 지방의원들이 의정활동 과정에서 겪을 수 있는 청탁금지법, 행동강령 위반 사례 등을 소개하는 '청렴토크콘서트'와 전통 판소리를 재해석한 '청렴판소리' 등으로 구성 되었다.

한편, 최근 다시 코로나19가 확산되는 상황을 고려하여, 교육 전소독, 체온 체크, 소독제 비치 등이 이루어졌고, 교육장 내에서는 마스크 착용, 충분한 이격 거리 확보 등의 방역 수칙을 철저히 준수하였다.

국민권익위원회 박은정 위원장은

"올해부터 새롭게 시도되는 권역단위 지방의회 청렴교육을 전북시군의회 의원들과 함께 해서 의미가 크다"며 "이번 교육이 지방의회 청렴교육의 새로운 모델이 되어 지역사회 청렴문화 조성에 기여하는 밑거름이 되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협의회장인 박병술 전주시의회 의장도 "교육과정을 마련해 준 국민권익위원회와 순창군의 지원에 감사드린다"며 "이번 교육을 통해 투명한 지방의회의 역할과 사명을 다하고 새로운 정치문화를 이끄는 계기가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아름다운 호수 위 산책로, 기지제가 달라졌다

지난 2018년 2월부터 시작된 만성지구 기지제 산책로 조성 사업이 최근 마무리되며 시민들의 관심이 뜨겁다. 코로나19로 답답했던 일상에서 벗어나 선선한 공기를 한껏 머금은 바람을 맞으며 산책하기 좋은 곳, 전북혁신도시와 만성지구 기지제의 순환산책로를 만나보자.

농업용수 공급지에서 전주 대표 산책로로

기지제는 농업용수 공급을 위해 1934년에 만들어진 꽤 큰 저수지이다. 전북혁신도시와 만성지구가 연이어 신도심으로 개발되면서 기지제의 쓰임도 달라졌다. ‘농업용수 공급지’에서 ‘도시생태의 한 축인 도시의 젖줄’로서의 역할이 부여됐다. 이에 전주시는 산책로를 꾸미고, 생태공원을 조성했다. 하지만, 기존에 조성된 산책로가 단절돼 있어 불편하다는 주민들의 의견을 반영해 기지제 전체를 순

환할 수 있는 산책로를 새롭게 만든 것이다.

이번에 조성된 산책로는 시민들이 물 위를 거닐며 경관을 감상할 수 있도록 총 1.79km 중 1.16km 구간에 수상 데크를 만들었다. 603m의 육상 황톳길과 24m의 교량도 설치했다. 이 산책로를 따라 초록의 물결을 걷다 보면, 다리 위에 늠름하게 서 있는 만성루와 마주할 수 있다. 만성루는 만성동의 지역명과 ‘모든 것이 흥한다’라는 한자어의 뜻이 있다. 만성루에 가만히 앉아 있으니 잠시나마 시간이 멈춘 것 같기도, 만성루를 사이로 시간이 바람을 타고 가는 듯한 기분이 들기도 했다.

자연과 사람을 배려한 친수 공간

높은 구름과 나란히 정렬해 있는 건물들의 그림자가 호수에 비친 것을 보니 계절은 가을임을 알리고 있었다. 산책



로와 제방을 연결하는 수상데크 구간을 걷다 보니 전주시의 세심한 배려를 체감할 수 있었다.

장애인과 임산부, 노인, 아동이 다치지 않고 안전하게 산책길을 이용할 수 있도록 최대한 완만한 경사로를 만들었다. 야간 산책을 하는 주민들을 위해 경관 조명 시설도 설치했다. 경관 조명 시설은 치안 문제를 해결하기도 하지만, 해가 진 밤의 호수 경관에 색을 입혀 주기도 했다. 이뿐 아니다. 기지제에 사는 동식물의 서식 환경을 보존하고, 호수 경관을 해치지 않도록 산책 노선을 최대한 중심부로부터 멀게 했다. 주변 생태 환경과 조화를 이룰 수 있도록 천연 목재를 활용했다.

주민들의 만족도도 높다. 이찬우(25) 씨는 “완만한 경사로가 노약자나 어르신, 임산부가 천천히 걸으며 산책하는 데 부담이 없을 것 같고, 산책로 재질과 색깔까지 자연

과 어울리게끔 구성한 세세함이 눈에 띄었다”며 만족감을 드러냈다.

전주시는 순환산책로에 이어 기지제 내에 횡단 산책로를 조성할 계획이다. 올해 연말 완공 예정인 횡단 산책로는 약 420m 구간으로, 순환형 산책로보다 폭을 더 넓게 만들어 인근 주민들이 쾌적하게 산책로를 이용할 수 있다. 게다가 혁신도시와 만성지구를 오가는 통학생과 시민들의 동선을 단축할 수 있도록 조성한다.

기지제는 산책로의 역할에만 국한되지 않는다. 전주시는 기지제에 2022년까지 전북학 자료실, VR(가상현실)체험관, 북카페 등이 들어선 전라북도 대표 도서관을 조성한다. 계절이 잠시나마 허락한 산책의 계절 가을에 선선한 바람과 함께 새로이 변화한 전북혁신도시·만성지구 기지제 산책로를 가족, 연인과 함께 걸어 보자.



팔복예술공장의 변신은 끝이 없다

팔복예술공장이 '예술교육 거점 공간'으로 자리매김하고 있다. 지난 해 예술교육 전용 공간인 팔복예술놀이터가 문을 연 데 이어 올해는 세계 희귀 그림책을 만날 수 있는 '아팝나무그림책도서관'이 새로 조성되었다. 실내·외 예술교육 체험공간 조성도 한창 진행 중이다. 하루가 다르게 변신하고 있는 팔복예술공장을 찾아가 보자.

예술 놀이로 공간의 매력을 더하다

2018년 팔복예술공장 1단지가 예술창작공간인 '팔복예술공장'으로 문을 열었다. 카세트테이프를 만들던 쏘렉스 공장이 25년 만에 복합문화공간으로 재탄생한 것이다. 공장이 처음 문을 열 때만 해도 붉은색과 검은색의 컨테이너, 우뚝 솟은 굴뚝, 폐자재를 활용해 꾸민 카페 '써니'가 이곳 인기의 원동력이었다.

하지만 이것은 곁에서 본 단면일 뿐, 팔복예술공장의 진짜 매력은 예술을 오감으로 체험하며 창의력을 키우고 협동심을 기르는 예술 놀이터라는 것이다. 전주시는 지난해 1단

지 팔복예술공장에 이어 2단지 리모델링을 마쳤다. 이곳이 바로 대규모 예술교육센터인 '팔복야호예술놀이터'이다. 아동과 청소년 문화예술교육을 진행하는 공간답게 널찍한 활동실과 야외창작·전시실, 텃밭과 무대, 아이들을 위한 식당으로 구성되었다. 이곳에서 아이들은 예술에 대한 지식이나 기술이 아니라 예술가의 시선으로 세상을 바라보고 표현하는 방법을 배운다. 또 팔복예술공장에서는 예술놀이와 관련한 포럼과 전시도 이어진다. 대표적인 것이 오는 12월 6일까지 열리는 예술 놀이 특별기획전 <눈으로 몸으로>. 문준용, 정승원, 한경우 작가가 시각과 인식 체계를 담은 '눈'과 행위, 몸짓을 담고 있는 '몸'을 작품에 담았다. 부족했던 인프라 역시 차곡차곡 채워지고 있다. 팔복예술공장은 올 연말까지 실내·외 공간에 예술교육 체험 공간을 조성한다. 야외예술타에는 물·흙, 모래·창작 예술타를 만들어 어린이와 청소년 방문객이 체험하고 즐기는 공간으로

만들 계획이다. 실내 예술교육실은 1인 미디어 시대 트렌드에 맞춰 ‘유튜브 스튜디오’로 꾸민다. 예술교육 체험 공간이 조성되면 시민과 관광객들이 예술 놀이를 자유롭게 향유할 수 있도록 상시 개방할 계획이다.

특별한 그림책도서관으로 공간의 품을 넓히다

팔복예술공장이 아이들부터 어른들까지 누구나 이용할 수 있도록 특별한 공간을 만들었다. 바로, 예술그림책도서관 〈이팝나무그림책도서관〉이다. 〈이팝나무그림책도서관〉은 세계 희귀 그림책을 수집하여 전시하고 열람할 수 있도록 예술교육 전용 공간인 팔복야호예술놀이터에 마련된 공간이다. 이곳의 첫 번째 도서 선정 주제는 아이부터 성인까지 함께 즐길 수 있는 세계 팝업북이다. 〈The Pop-up Books; 팝업북의 역사를 만나다〉를 주제로 하는 이번 전시회에서는 국내에서 접하기 힘든 1820년대 빈티지 팝업북부터 2000년대 현대 팝업북까지 80여 권의 주요 팝업북이 소개되며, 시대에 따라 팝업북이 어떻게 발전되어 왔는지 그 기술과 창의성의 진화를 엿볼 수 있다.

1820년대 제작된 바르세유 궁전 터널북과 파노라마북 최초의 그림책인 사무엘 에드워드 마밸리의 〈험프티 덤프티 (Humpty Dumpty)〉 등 시대를 대표하는 팝업의 명장면과 만나는 감동을 선사한다.

팝업북은 책을 펼치면 이미지가 입체적으로 솟아오르는 팝업의 형태 외에도 작은 구멍 사이로 깊이 있는 풍경을 재현한 터널북, 360도로 펼쳐지는 캐리셀북, 제본하지 않고 주름을 접어 만든 파노라마북, 텁을 당기면 움직이는 무버블북까지 다양하다. 최근 이를 통칭하여 팝업북으로 부르고 있는데 이번 전시에서는 다양한 형태의 팝업북들을 만나고 경험할 수 있도록 구성했다. 또한, 팔복예술공장의 A동과 B



팔복예술공장

주소 | 전주시 덕진구 구례들 1길 46
운영시간 | 10:00~18:00(전시장 입장 마감: 17:30)
문의 | 063-211-0288
홈페이지 | www.palbokart.kr

동을 연결하는 컨테이너 브리지 아래 ‘그림방’에서는 이번 전시와 연계해 팔복예술공장 방문객들이 자유로이 관람할 수 있도록 애니메이션 팝업북을 전시하고 있다.

팔복예술공장 관계자는 “이팝나무그림책도서관은 ‘예술이 책이 되고 책이 예술이 된다’라는 공간 운영 철학 아래 앞으로 예술 그림책을 활용한 다채로운 예술교육 프로그램을 진행할 계획이며, 세계 대표 팝업북을 한자리에 모은 이번 전시를 통해 예술 그림책으로 떠나는 시간 여행을 즐길 수 있기를 바란다.”라고 밝혔다.

이팝나무그림책도서관 개관전 전시 관람 및 이용은 오전 10시부터 오후 6시까지이며, 온라인 예약을 통한 사전 예약 관람제로 운영된다. 온라인 예약은 팔복예술공장 홈페이지 (www.palbokart.kr)를 통해 할 수 있으며, 매주 월요일은 휴관이다.



2021년도회기운영계획

월별	회기	회의 일수	주요 안건	비고
연간	총 10회 (정례회2회/임시회8회)	106		
1월	제377회 임시회	5	<ul style="list-style-type: none"> 조례안 등 안건심의 및 현장활동 	
	1.14.(목)~1.18.(월)			
2월	제378회 임시회	8	<ul style="list-style-type: none"> 2021년도 주요업무계획 보고·청취 조례안 등 안건심의 및 현장활동 	*설날연휴 (2.11~14)
	2.19.(금)~2.26.(금)			
3월	제379회 임시회	10	<ul style="list-style-type: none"> 시정에 대한 질문 2020회계연도 결산검사위원 선임 조례안 등 안건심의 및 현장활동 	
	3.17.(수)~3.26.(금)			
4월	제380회 임시회	5	<ul style="list-style-type: none"> 조례안 등 안건심의 및 현장활동 	*재보궐선거 (4.7)
	4.19.(월)~4.23.(금)			
5월	제381회 임시회	7	<ul style="list-style-type: none"> 조례안 등 안건심의 및 현장활동 	*국제영화제 (4.29~5.8)
	5.11.(화)~5.17.(월)			
6월	제382회 제1차정례회	14	<ul style="list-style-type: none"> 2020회계연도 결산 및 예비비 지출(사용) 승인안 심의 2021년도 제1회 추경 예산안 심의 조례안 등 안건심의 및 현장활동 	*전주단오제 (6.13~14)
	6.10.(목)~6.23.(수)			
7월	제383회 임시회	9	<ul style="list-style-type: none"> 2021년도 주요업무 추진상황 보고·청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 조례안 등 안건심의 및 현장활동 	
	7.15(목)~7.23.(금)			
9월	제384회 임시회	9	<ul style="list-style-type: none"> 시정에 대한 질문 조례안 등 안건심의 및 현장활동 	*추석연휴 (9.18~22)
	9.1.(수)~9.9.(목)			
10월	제385회 임시회	7	<ul style="list-style-type: none"> 2021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기간·방법) 결정 조례안 등 안건심의 및 현장활동 	*전주시민체육 대회 (10.1~2)
	10.14.(목)~10.20.(수)			
11월 ~ 12월	제386회 제2차정례회	32	<ul style="list-style-type: none"> 2021년도 행정사무감사 실시 시정에 대한 질문 2021년도 제2회 추경 및 2022년도 예산안 심의 조례안 등 안건심의 및 현장활동 	
	11.15.(월)~12.16.(목)			

※ 매 회기별 일정은 의회운영위원회 협의과정과 사정에 따라 변경될 수 있습니다.

편집을 마치며...



지난해 7월, 첫걸음을 내디딘 전주시의회 제11대 후반기 의회는 '시민과 함께하는 전주시의회'를 기치로 시민의 행복과 전주시의 발전을 위해 숨 가쁘게 달려왔습니다. 때로는 아쉬움이 남는 일도 있었지만, 그 또한 내일이라는 희망의 밑거름이 되리라고 확신하며,

2021년 의정활동 역시 시민을 최우선으로, 66만 시민의 행복과 삶의 질 향상을 위해 최선을 다할 것을 약속드립니다.

편집위원



이기동 의원



김호성 의원



송승용 의원



송영진 의원



정석길 의원

